



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진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지방대학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정책 필요성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 증대	04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06
	3. 지방대학 위기에 따른 전북의 상생협력정책 수립 필요	08
II	전북의 지역여건 분석	
	1.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 지역대학의 위기	11
	2. 전북의 대학지원사업 현황	17
III	국내 관련 정책 동향 분석	
	1.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23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	31
IV	해외 관련 사례 분석	
	1. 일본의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	41
	2. 미국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57
V	지자체-지방대학 상생협력방안	
	1. 기본방향	65
	2. 추진전략	68
	3.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73
	4. 지자체-대학-지역기업 협력체계 강화	76
	참고문헌	79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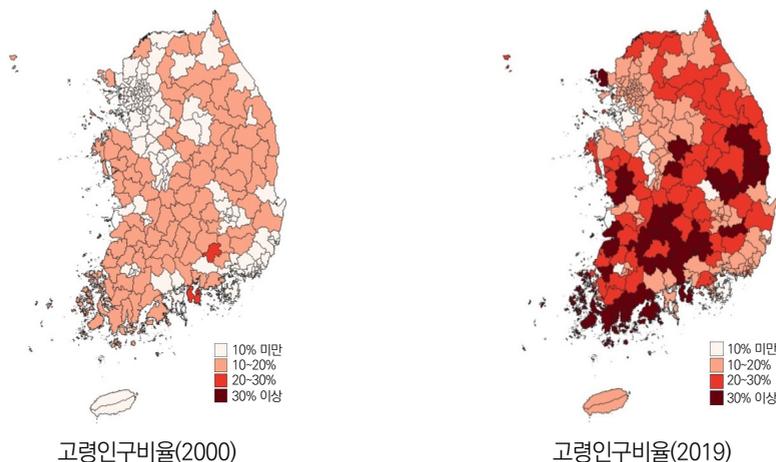
지방대학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정책 필요성

1.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 증대

한국의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 통계청(2019)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47년에는 전북 등 11개 시도의 인구가 감소하며, 2044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인구 감소 예측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한국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미만으로 하락하여, 2020년은 0.84
 - 2019년 기준 229개(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 제주, 서귀포) 시군구 중 105개(45.9%)가 고령화율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 그림 1-1 | 2000년 대비 2019년 고령인구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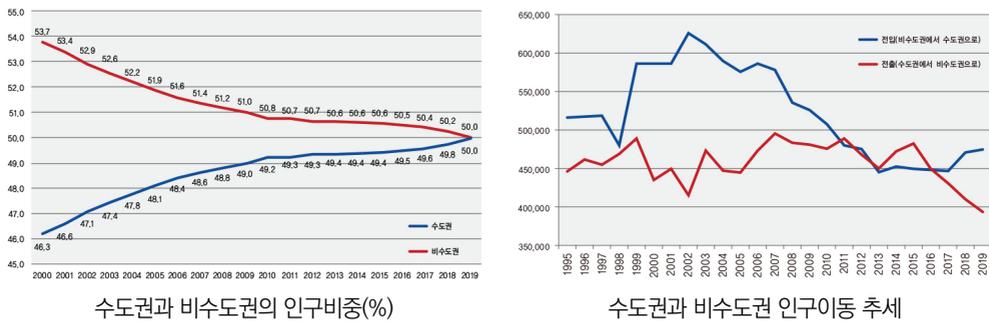


자료 : 박진경(2020)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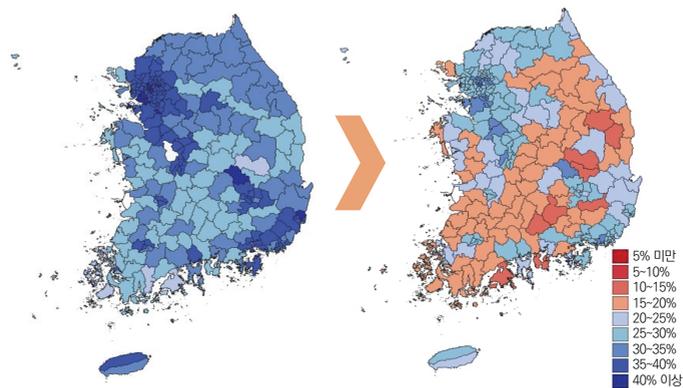
-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로 비수도권 인구 역전
 -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9년 역전됨

• 그림 1-2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및 인구이동추세 •



- 지방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의 순유입이 재증가됨
 - 2020년,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순유입을 보인 시도는 세종(3.8%), 경기(1.3%) 등 6개 시도에 불과하며, 전북의 경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0.5% 순이동률을 나타내고 있음(통계청, 2021)

• 그림 1-3 | 20~30대 젊은 인구 비율(2000년 및 20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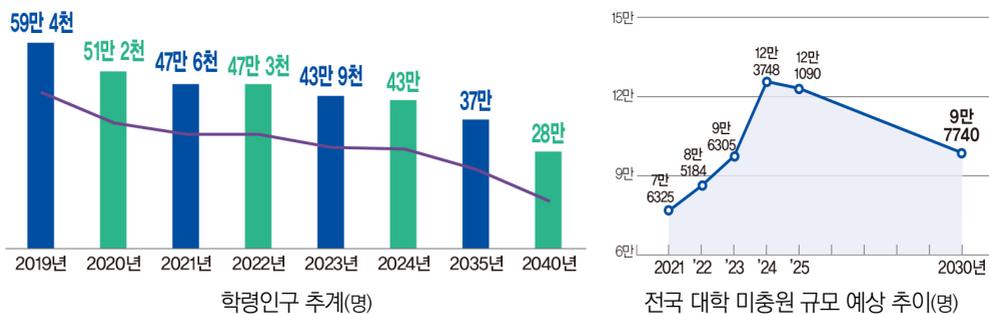
- 특히 지방의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지방은 인구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문제가 가중
 - 20~30대 청년의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으로의 이동 증가로 지방의 인구문제 심화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 학령인구가 대학입학 정원은 49만 2천 명에 미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62개 대학에서 2만 6,129명의 신입생을 추가모집 실시
 - 2021년 4년제 대학이 7차 추가모집에도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 가운데 90%가 지방대로 나타남(뉴시스, 2021. 3. 4)

• 그림 1-4 | 학령인구 추계 및 전국대학 미충원 규모 예상 추이 •



자료 : 교육부(2021) 및 뉴시스 2021. 3. 4일자

- 지난 10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입학자 수가 2010년 38만 1,260명에서 2020년 32만 9,948명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베리타스, 2021. 5. 17)
 - 학령인구감소로 같은 기간 고교 졸업자가 63만 3,539명에서 50만 373명으로 13만 3천 명 이상 대폭 감소한 영향임

- 이러한 영향을 시도별 대학 입학자수로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10년간 이 영향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전국에서 입학자수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010년 대비 2020년 입학자수가 17.9%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남, 전남, 경북, 충남, 전북 순으로 나타났음
 - 2010년 1만 9,777명이 입학한 전북의 경우 2020년 1만 6,864명이 입학하여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령인구감소로 전국적으로 입학자수가 감소하였다고 하나, 서울과 인천은 오히려 대학 입학자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표 1-1 | 시도별 대학 입학자수 비교 •

(단위 : 명, %)

시도	입학자 증감현황		2020년		2010	
	비율	인원	입학정원	입학자	입학정원	입학자
울산	-17.9	▼717	3,092	3,294	3,750	4,011
경남	-16.6	▼2,757	1만 3,550	1만 3,811	1만 5,405	1만 6,568
전남	-16.4	▼1,690	8,186	8,621	9,993	1만 311
경북	-15.6	▼4,863	2만 5,146	2만 6,320	2만 9,210	3만 1,183
충남	-15.4	▼5,394	2만 6,876	2만 9,637	3만 2,287	3,031
전북	-14.7	▼2,913	1만 5,528	1만 6,864	1만 8,416	1만 9,777
강원	-12.7	▼2,505	1만 6,116	1만 7,255	1만 7,977	1만 9,760
부산	-11.3	▼4,181	3만 436	3만 2,845	3만 3,754	3만 7,026
세종	-10.8	▼346	2,657	2,863	2,939	3,209
충북	-9.4	▼1,797	1만 6,125	1만 7,325	1만 7,852	1만 9,122
대구	-8.5	▼989	9,822	1만 670	1만 638	1만 1,659
대전	-6.1	▼1,252	1만 8,224	1만 9,212	1만 8,909	2만 464
제주	-5.4	▼141	2,450	2,462	2,604	2,603
경기	-4.7	▼2,030	3만 7,475	4만 1,251	3만 8,908	4만 3,281
광주	-3.9	▼606	1만 3,825	1만 5,000	1만 4,524	1만 5,606
서울	0.9	▲732	7만 2,666	8만 4,818	7만 4,562	8만 4,086
인천	1.8	▲137	6,789	7,700	7,282	7,563
전체	-8.2	▼3만 1,312	31만 8,693	34만 9,948	34만 9,010	38만 1,260

* 증감 비율 큰 순

* 자료 : 종로학원하늘교육자료(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기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 1차 유출되고 구직단계(20대)에서 2차 유출됨(통계청, 2021)
 - 학업과 직업의 원인으로 20대를 지나는 동안 극심한 지방 청년인구의 감소
-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
 - 이로 인해 지방대의 우수인재 유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청년 시기에 지역을 떠난 청년들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의 귀환율이 극히 낮으며, 최근 50대 이후에서야 지방 재유입 경향이 확인됨(이상림, 2020)
 - 50대 이후의 귀환은 고령화와 빈곤의 문제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일으킴
- 지역 청년의 지역대학 진학 유도 및 지역 일자리 정착 정책 등으로 지방 위기의 악순환 제거 필요(이소영,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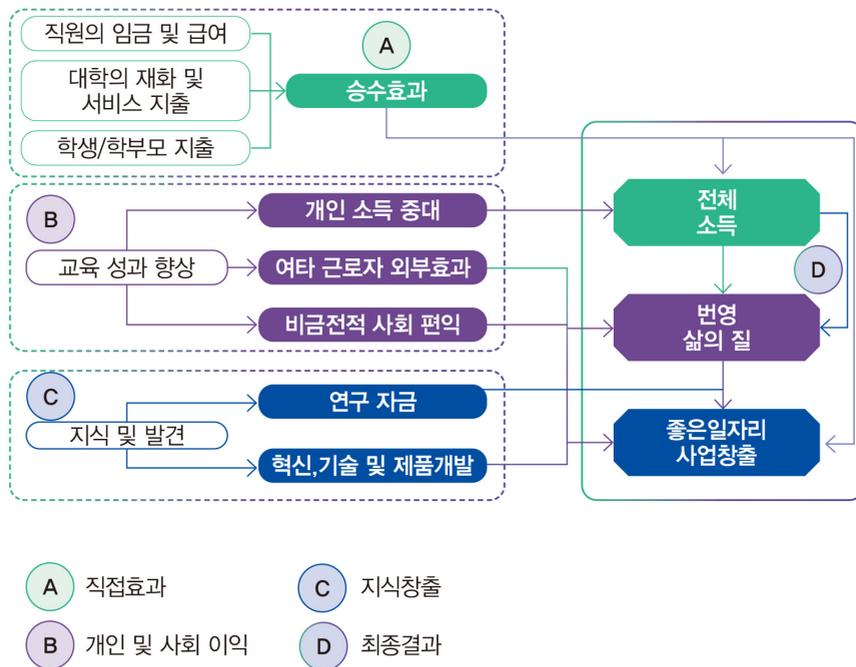
3. 지방대학 위기에 따른 전북의 상생협력정책 수립 필요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속

- Hill & Hoffman(2009)은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 둘째, 개인 및 사회적 이익 효과, 셋째, 지식 창출 효과를 들고 있음
 - 첫째, 대학이 기업 혹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에 의해 영향을 줌
 - 둘째,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인적자본을 양산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높아진 교육 수준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 사회적 이익을 창출
 - 셋째, 대학은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의 연구활동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혁신을 가져오는 지식을 창출하여, 지역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

- EU(2011)는 대학의 일반적인 산업으로서 역할 외에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4대 영역을 제시
 - 첫째,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혁신 향상에 기여, 둘째, 지역기업 발전과 성장 촉진에 기여, 셋째, 지역의 인적자본과 숙련도 향상, 넷째,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임

• 그림 1-5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자료 : Hill&Hoffman(2009)

대학생태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지역대학 정책 수립 필요

- 학령인구감소는 향후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대한민국의 대학은 대학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판을 설계해야 한다고 함(조영태, 2021)
 - 현재 대학 재적수가 유지된다면, 2044년 이후에는 수도권 대학조차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

-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으로는 일시적인 시간은 벌어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단기적인 임시방편만 설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대학 생태계의 새로운 판을 조성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관점의 지역대학 정책 수립이 필요

II

전북의 지역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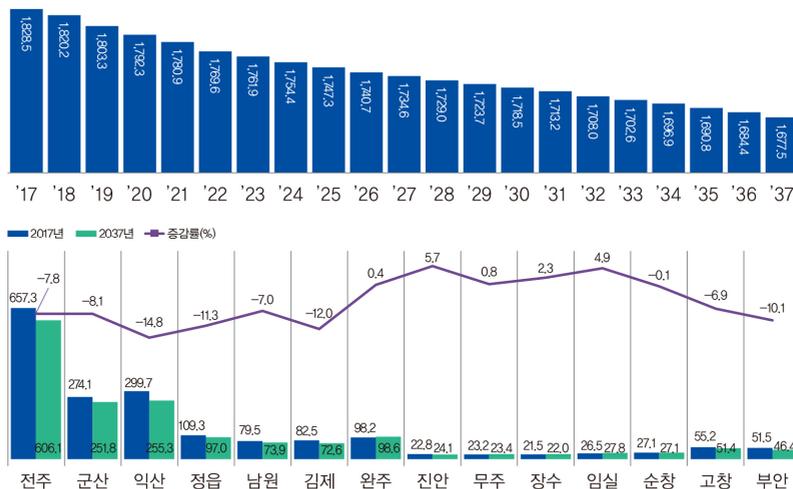
1.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 지역대학의 위기

전북의 인구구조변화

- 전북에서 발표한 시군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1,828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7년에는 150천명(-8.3%) 감소한 1,677천 명으로 전망
 - 2021년 7월말 기준, 전북 인구수는 1,793,902명으로 180만 명 이하로 감소함
 - 시 지역인구는 '17년 1,502천 명(82.2%)에서 '37년 1,356천 명(80.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군 지역의 인구는 '17년 326천 명(17.8%)에서 '37년 320천 명(19.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림 2-1 | 전북 총인구 및 시군별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17~'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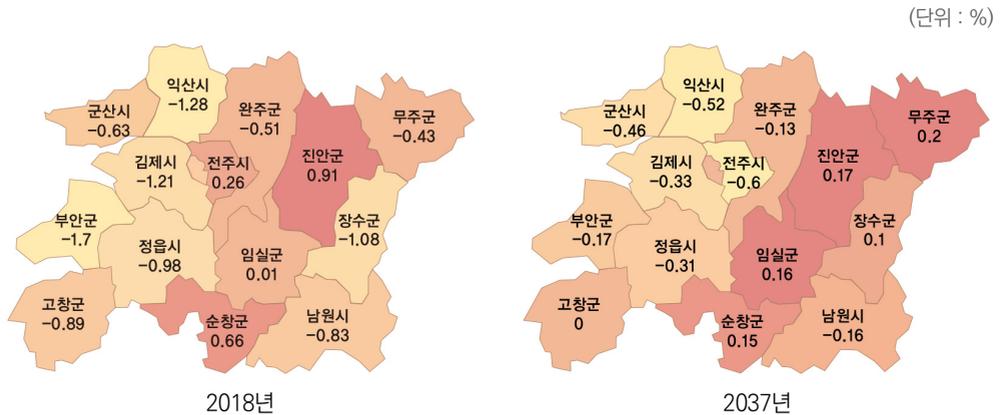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전라북도(2020)

- 전북의 인구성장률은 2018년 이후 203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8년(-0.46%), 2027년(-0.35%), 2037년(-0.41%)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

• 그림 2-2 | 전북 시·군별 인구성장률 •



자료 : 전라북도(2020)

- 또한 시·군별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북은 2016년에 이미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으며, 2020년 이후 14개 모든 시·군에서 인구 자연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 표 2-1 | '18~'37년 전북 자연증가율 •

(단위 : %)

구분	2018년	2022년	2027년	2032년	2037년
전라북도	-0.26	-0.39	-0.42	-0.54	-0.72
전주시	0.12	-0.03	-0.01	-0.08	-0.23
군산시	-0.07	-0.22	-0.25	-0.36	-0.56
익산시	-0.11	-0.32	-0.36	-0.47	-0.37
정읍시	-0.69	-0.93	-1.01	-1.09	-1.24
남원시	-0.59	-0.84	-0.93	-1.06	-1.22
김제시	-0.79	-1.02	-1.11	-1.20	-1.34
완주군	-0.17	-0.33	-0.34	-0.49	-0.70
진안군	-0.79	-1.02	-1.14	-1.26	-1.44
무주군	-0.90	-1.09	-1.22	-1.31	-1.45
장수군	-0.96	-1.04	-1.11	-1.21	-1.37
임실군	-0.71	-0.92	-1.03	-1.22	-1.38

구분	2018년	2022년	2027년	2032년	2037년
순창군	-0.80	-1.16	-1.18	-1.20	-1.35
고창군	-0.86	-1.24	-1.32	-1.39	-1.51
부안군	-0.79	-1.16	-1.25	-1.33	-1.46

주 : 자연증가율은 자연증가(=출생-사망)를 인구로 나눈 비율임
 자료 : 전라북도(2020)

- 중위 연령은 '17년 44.5세, '27년 51.6세, '37년 56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군별 인구 피라미드는 '17년 항아리 모양에서 점차 변하여 '37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
 -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17년 18.5%(339천 명)에서 2037년 36.7%(616천 명) 18.2%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모든 시·군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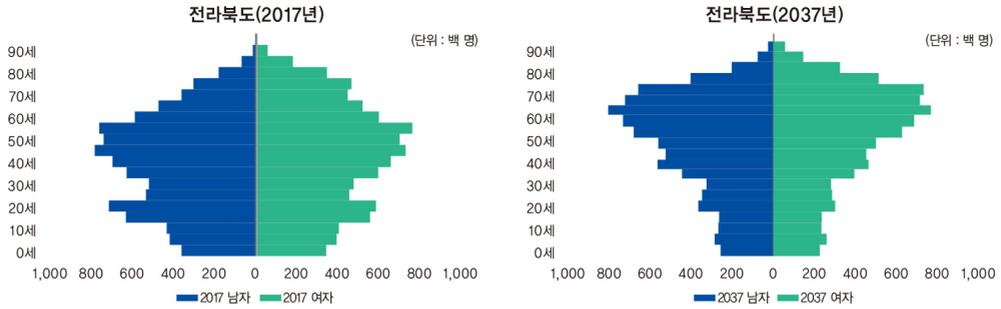
• 표 2-2 | '17~'37년 전북의 시·군별 중위연령 •

(단위 : %)

구분	2017년	2022년	2027년	2032년	2037년	'17년 대비 '37년 증감
전라북도	44.5	48.3	51.6	54.3	56.9	12.4
전주시	40.7	43.7	46.7	49.4	51.4	10.7
군산시	42.7	46.6	49.8	52.7	55.5	12.8
익산시	43.2	47.7	51.4	54.3	56.9	13.7
정읍시	49.1	53.0	56.3	59.2	61.8	12.7
남원시	49.9	53.8	57.2	60.1	62.9	13.0
김제시	52.4	55.9	58.6	61.2	63.7	11.3
완주군	43.3	48.7	52.3	55.3	58.0	14.7
진안군	55.7	59.0	61.2	63.5	65.9	10.2
무주군	54.7	57.7	60.5	63.0	65.4	10.7
장수군	54.0	56.4	59.4	62.1	64.6	10.6
임실군	54.7	57.5	60.4	63.1	65.7	11.0
순창군	54.7	57.6	59.2	61.5	63.8	9.1
고창군	53.9	58.2	60.0	62.2	64.5	10.6
부안군	53.8	58.0	60.3	62.4	64.6	10.8

주 :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EO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임
 자료 : 전라북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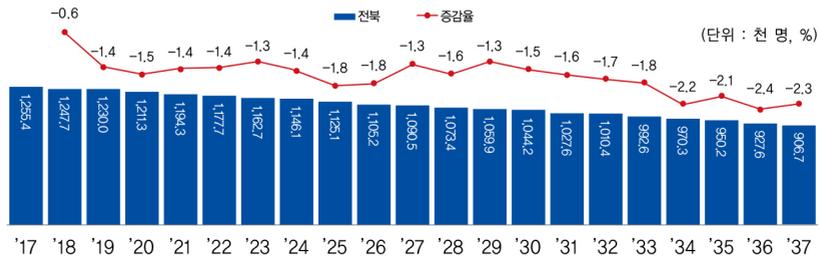
• 그림 2-3 | '17~'37년 전북의 시·군별 인구피라미드 •



자료 : 전라북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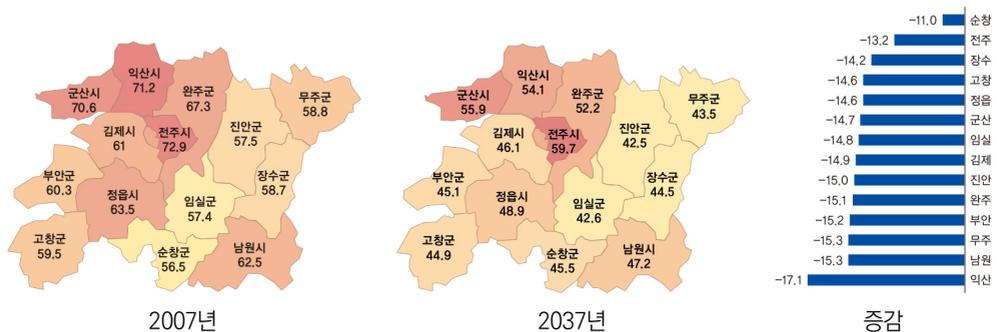
- 전북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 15~64세 1,255천 명(68.7%)에서 '37년에는 906천 명 감소하여 906천 명(54.0%)으로 전망함

• 그림 2-4 | 전북 연도별 생산가능 인구(15~64세) •



자료 : 전라북도(2020)

• 그림 2-5 | '17~'37년 시·군별 생산가능인구 구성비(%) 및 증감(%) •



자료 : 전라북도(2020)

인구감소에 따른 전북 지역대학의 위기

- 전북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98.0%에서 2021년 89.7%로 약 8.3% 감소함
- 2021년 4월 기준, 도내 대학 현황 및 신입생 미충원률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중 총 5개 대학(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과 전문대학 1개 대학(전주기전대학)이 미충원 대학으로 나타남
 - 특히, 호원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의 경우, 충원율이 각각 76.5%, 76.0%로, 미충원율이 각각 23.5%, 24%에 달함

• 표 2-3 | 전북 도내 대학 현황 및 신입생 미충원 현황 •

대학명	2019.4	2020.4	2021.4				
	충원율	충원율	모집 인원	입학자	미충원	충원율	
계	-	98.0	21,416	19,217	2,199	89.7	
4년제 (10개)	군산대학교	99.8	99.8	1,735	1,504	231	86.7
	예수대학교	99.2	100.0	131	129	2	98.5
	예원예술대학교	98.1	98.1	188	186	2	98.9
	우석대학교	99.4	99.1	1,726	1,453	273	84.2
	원광대학교	99.4	99.5	3,543	2,833	710	80.0
	전북대학교	99.6	99.7	3,829	3,813	16	99.6
	전주대학교	99.6	100.0	2,570	2,379	191	92.6
	한일장신대학교	99.1	100.0	219	193	26	88.1
	전주교육대학교	99.0	98.6	285	285	-	100.0
	호원대학교	99.1	99.5	1,115	853	262	76.5
전문 대학 (8개)	군산간호대학	100.0	100.0	221	221	-	100.0
	군장대학	99.1	95.3	672	625	47	93.0
	백제예술대학	94.9	91.5	603	529	74	87.7
	원광보건대학	100.0	100.0	1,478	1,394	84	94.3
	전북과학대학	100.0	100.0	620	603	17	97.3
	전주기전대학	94.3	87.2	813	618	195	76.0
전주비전대학	100.0	99.0	1,098	1,029	69	93.7	
한국농수산대학	100.0	100.0	570	570	-	100.0	

자료 : 전라북도(2021), 내부자료

- 전북도내 폐교 대학은 익산의 익산대학, 김제의 벽성대학, 남원의 서남대학교(남원), 군산의 서해대학 총 4곳으로 나타남
 - 익산대학의 경우 농·공업 계열의 국립전문 대학으로 전북대와 통합하였음

• 표 2-4 | 전북 도내 폐교 대학 현황 •

대학명	유형	운영기간	폐교 전 학생규모	폐교사유
익산대학 (익산)	국립 전문대학	1991~2008	1,800명	농업·공업 계열의 국립 전문대학으로 전북대와 통합
벽성대학 (김제)	전문대학	1995~2014	1,441명	-
서남대학교 (남원)	종합대학	1991~2018	2,070명	-
서해대학 (군산)	전문대학	1974~2021	1,275명	-

자료 : 전라북도(2021), 내부자료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도내 현황은 예원예술대와 서해대이며, 2022년에는 예원예술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됨
 - 재정지원제한의 평가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이며, 최종 미충족 지표 개수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

• 표 2-5 | 도내 재정지원제한대학 현황 •

연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2012	서남대, 원광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2013	서남대, 호원대	군장대, 서해대,
2014	서남대, 우석대	군장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2015	서남대	서해대
2016	호원대, 서남대	전주비전대
2017	호원대, 서남대	-
2018	서남대	서해대
2019	-	서해대
2020	예원예술대	서해대
2021	예원예술대	서해대
2022	예원예술대	-

자료 : 전라북도(2021), 내부자료

2. 전북의 대학지원사업 현황

전북의 대학지원사업(2016~2020)

- 전북의 대학지원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의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
 - 도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중앙부처로부터 직접 사업비를 지원 받는 경우, 도 차원에서는 사업 현황조사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라, 전북에서는 2020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전북 도내 대학의 지원 현황을 파악한 바 있음
- 전북도내 대학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1개 사업에 총 444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음(국가직접지원예산 별도)
 - 이 가운데, 279억 원이 도비 재원으로 충당되어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지방재정에서 충당되고 있음

• 표 2-6 | 전북의 대학지원사업(2016~2020) •

(단위 : 백만 원)

연번	구분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비고	
				연도별	계	국비		도비
	합계		11개 사업(종료 6, 계속 5) 【R&D 6, 인력양성 5】	합계	44,407	16,486 <29,237>	27,921	<국가직접>
1	R&D	정보화 총괄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전북대)	소계	2,460	2,400	60	종료
				2018	820	800	20	
				2017	820	800	20	
				2016	820	800	20	
2	인력 양성	혁신성장 정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전문대학(LINC) 육성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 LINC+ 사업추진(17~22)	소계	646	<23,258>	646	종료
				2017	40	<2,000>	40	
				2016	606	<21,258>	606	
3	R&D	주력 산업과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사업 (군산대)	소계	256	-	256	종료
				2018	70	-	70	
				2017	133	-	133	
				2016	53	-	53	

연번	구분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비고	
				연도별	계	국비		도비
4	R&D	주력 산업과	기계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 (군산대)	소계	288	<222>	288	종료
				2017	185	<70>	185	
				2016	103	<152>	103	
5	R&D	탄소 융복합과	로스알라모스-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설립 (전북대)	소계	750	<1,531>	750	종료
				2017	400	<722>	400	
				2016	350	<759>	350	
6	R&D	신재생 에너지과	풍력에너지 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육성 (전북대)	소계	200	<1,200>	200	종료
				2016	200	<1,200>	200	
7	인력 양성	자치 행정과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기전대, 군산간호대)	소계	750	-	750	계속
				2020	150	-	150	
				2019	150	-	150	
				2018	150	-	150	
				2017	150	-	150	
				2016	150	-	150	
8	인력 양성	일자리 경제 정책관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전주대, 원광대)	소계	3,132	1,686	1,446	계속
				2020	2,066	1,048	1,018	
				2019	1,066	638	428	
9	인력 양성	기업 지원과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기전대, 호원대)	소계	19,019	5,400	13,619	계속, '20년 균특이양
				2020	3,459	-	3,459	
				2019	3,460	1,170	2,290	
				2018	3,460	1,170	2,290	
				2017	3,980	1,360	2,620	
				2016	4,660	1,700	2,960	
10	인력 양성	기업 지원과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소계	14,906	7,000	7,906	계속, '20년 균특이양
				2020	3,006	-	3,006	
				2019	3,400	2,000	1,400	
				2018	2,890	1,700	1,190	
				2017	2,890	1,700	1,190	
				2016	2,720	1,600	1,120	
11	R&D	탄소 융복합과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 (전북대)	소계	2,000	<3,026>	2,000	계속
				2020	1,000	<2,226>	1,000	
				2019	1,000	<800>	1,000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R&D사업에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인력양성 사업에 지원
 - R&D 사업은 정보화총괄과, 주력산업과, 탄소 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과 등 산업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사업은 혁신성장정책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등에서 지원
- 전북의 다양한 부서가 대학지원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나, 예산부서 이외에 대학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음

2020년 전북의 대학지원사업

- 2020년 대학별 전북 대학지원사업은 총 112개로 205억 원(국비 54억 원, 도비 1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국가직접지원예산 별도)
 - 전북대는 34개 사업에 7,963백만 원, 전주대 18개 사업(4,627백만 원), 원광대 15개 사업(3,316백만 원), 군산대 15개 사업(1,747백만 원) 등을 지원 받음

• 표 2-7 | 2020년 대학별 전북 대학지원사업 •

(단위 : 백만 원)

대학명	사업수	사업비			도비 지원비율
		합계	국비	도비	
합계	112	20,484	5,344 <51,444>	15,140	100%
전북대	34	7,963	3,213 <15,261>	4,750	31.4%
전주대	18	4,627	1,015 <7,243>	3,612	23.9%
원광대	15	3,316	633 <7,024>	2,683	17.7%
군산대	15	1,747	- <14,962>	1,747	11.6%
우석대	8	968	265 <3,884>	703	4.6%
기타대학 (8개 대학)	22	1,863	218 <3,070>	1,645	10.8%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 분야별로는 인력양성(23개) 12,181백만 원, R&D(15개) 3,076백만 원, 의료지원(12개) 2,886백만 원, 기타(10개) 2,341백만 원으로 나타남

• 표 2-8 | 2020년 분야별 사업비 •

(단위 : 백만 원)

분야	사업수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60	20,484	5,344 (51,444)	15,140	
인력양성	23	12,181	1,998 (29,066)	10,183	
R&D	15	3,076	1,000 (22,366)	2,076	
의료지원	12	2,886	1,394	1,492	
기타	10	2,341	952 (12)	1,389	위탁사무 등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 재원별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19개, 국가직접사업 26개, 순도비사업 15개 총 60개 사업으로 국가직접사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60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국비 53억 원과 도비 152억 원이 투입되었음 (국가직접사업비 514억 원 별도 집계)
 - 국가직접사업은 교육부 등에서 각 대학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차원의 대학 지원 업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비 지원 시 도비 10%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정책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임

• 표 2-9 | 2020년 재원별 사업비 •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수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60	20,484	5,344 (51,444)	15,140	
국고보조사업	19	9,591	5,344	4,247	
국가직접사업	26	3,170	(51,444)	3,170	
순도비사업	15	7,723	-	7,723	'20 균특이양사업(4건) 34억 원 포함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 부서별 사업을 살펴보면, 총 25개 사업 중 일자리 및 산업분야가 각각 12건 및 9건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행정 2건, 농업 2건, 복지 1건 등으로 나타남

• 표 2-10 | 부서별 사업 및 지원대학 •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지원대학
1	행정	자치행정과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6개 대학
2	행정	자치행정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9개 대학
3	농업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전북대, 한국농수산대
4	농업	농업정책과	미래 농산업 CEO과정 운영	한국농수산대
5	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우석대 ※ 20년 원광대
6-1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	우석대
6-2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혁신리빙랩을 통한 소셜벤처 및 리더 육성사업)	전주대
7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등 5개 대학
8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초기창업패키지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9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	전주대 ※ 20년 군산대
10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지원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 9개 대학
11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전주대, 원광대
12	일자리	일자리경제정책관	경제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전주대
13	일자리	기업지원과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 9개 대학
14	일자리	기업지원과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15	일자리	기업지원과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전주비전대, 군장대
16	일자리	기업지원과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전북대
17	산업	혁신성장정책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5개 대학
18	산업	혁신성장정책과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 지원	원광대
19	산업	주력산업과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군산대
20	산업	주력산업과	조선기자재사업 다각화 생태계 구축	군산대

연번	분야	부서	사업명	지원대학
21	산업	주력산업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원광대
22	산업	주력산업과	해양설비 기자재산업 육성 지원사업	군산대
23	산업	탄소융복합과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전주대
24	산업	탄소융복합과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전북대
25	산업	신재생에너지과	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연구개발	군산대

자료 : 전라북도(2020), 내부자료

전북의 대학지원 조직 현황

- 다양한 부서가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도상 지방대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내 인재평생교육팀임
 - 인재평생교육팀은 팀장 1인 외 5인으로 구성되어, 주로 평생교육, 교육청 협력, 교육 관련 시책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지방대학 간 상생발전 업무 등 대학 지원업무는 주무관 1인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표 2-11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

구분	담당업무
교육청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간부회의, BSC, 도의회 관련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관리 및 운영지원(장학금 운영, 인재육성사업 지원) •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교육청 협력·교육 관련 시책개발
평생교육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 전라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도시 업무(박람회, 축제, 교육부 공모) • 민주시민교육 등 평생교육 관련 시책 추진, 평생교육 통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지방대학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지방대학 협력 및 상생발전 사업 •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비대면콘텐츠 개발, 교육부 공모사업 등
전북형 행복학습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고전교육 특화사업 • 팀 소관 비영리법인(단체)등록, 팀 관련 행사지원 및 포상 추진, 팀 예산 및 일반서무
교육환경 개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기숙형 고교 지원 업무,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업무, 자유학기제 운영

자료 :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 검색일: 2021. 9. 17)

III

국내 관련 정책 동향 분석

1. 중앙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1) 역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문재인 정부 이전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정책

-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이 추진됨
 -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테크노폴리스 조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사업,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조성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등
 -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임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투자는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참여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과제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사업을 추진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대학 육성 관련 핵심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 2,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약 19만여 명의 지방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받음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대학교육에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육성사업인 지역우수대학원지원사업은 수도권 대학의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은 예산이 적어 효과가 미미하였음

-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은 추가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음
 -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가장 규모가 컸던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 980억 원을 투자
 -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¹⁾으로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총 1,500억 원을 투자함
 - 그러나 기존 사업들은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했던 반면 이 당시에는 공시된 지표를 활용(포물러 방식)하면서 지원대학이 대규모 대학에 치중되어 대학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
- 박근혜 정부도 관련 재정지원정책이 유사하게 나타남
 - 지난 정부에서부터 실시되어 온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BK21플러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 그 밖에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으로 대학특성화(CK)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을 추진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대 정권별 지방대학 재정지원 정책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표 3-1 | 역대 정권별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 ●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참여 정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2004~2008	(5년간) 총 1조 2,400억 원
	산학협력중심 대학육성사업	2004~2008	(5년간) 총 2,060억 원
	지방연구중심 대학육성사업	2004~2007	매년 100 억원씩 4년간 총 400억 원 (사업단별 25억 원)
	2단계 중심대학(BK21) 육성사업	2006~2013. 2	(7년간) 총 1조 8,000억 원
이명박 정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09~2016	교육역량강화 지원 부문 (4년간) 총 1조 980억 원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2008~2013	(5년간) 8,250억 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2009~2012.04	매년 1,000억 원씩 5년간 5,000억 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2012~2017	2012년 총 1,820억 원, 2013년 총 3,800억 원 지원

1) 이명박 정부가 추진 정책 사업 중 하나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기존의 누리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등을 통합한 사업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박근혜 정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사업 ²⁾	2010~현재	(4년간) 594억 원
	BK21플러스사업	2013~2020	(7년간) 2,725억 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	2012~2016	(5년간) 2,240억 원
	대학특성화(CK)사업	2014~2018	(5년간) 2,467억 원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2016~2018	(3년간) 2,012억 원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2016~2018	(3년간) 600억 원

자료 : 김정희(2013); 전재식 외(2016)

2) 문재인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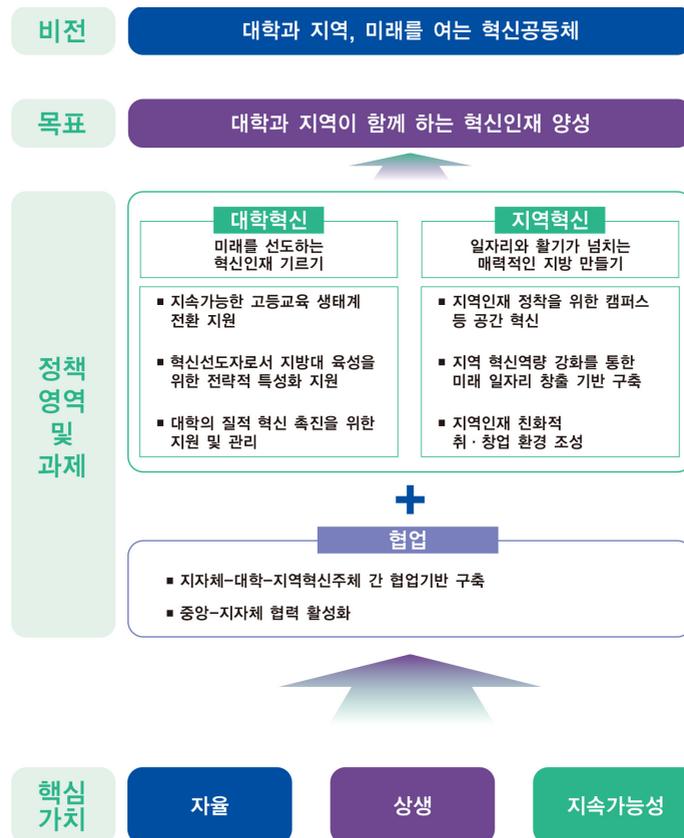
- 2021년 3월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
 -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핵심축으로써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둠
- 제1차 기본계획(2016~2020)으로 일부 성과가 도출되긴 하였으나,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판단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 및 목표를 수립
 -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공동체’라는 비전과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를 수립하고,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이라는 세 가지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

2) ACE사업은 2010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으며, 2016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기존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을 확대·개편함에 따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으로 지원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혁신의 추진

- 먼저,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은 협업에 기반한 동반성장형 지방대학 혁신 지원을 지향하며, 핵심과제로 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 ②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글로벌, 디지털), ③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 제시
- ①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을 위해 ①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② 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③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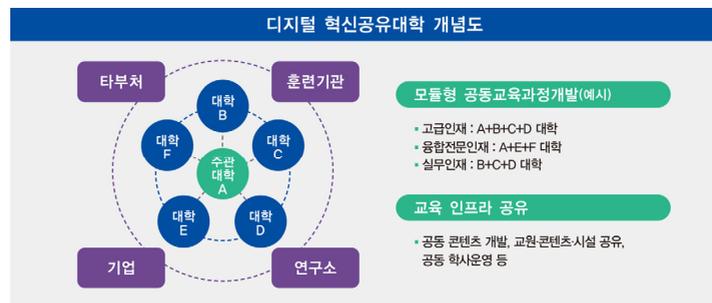
• 그림 3-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정책 비전 및 목표 •



출처 : 교육부(2021)

-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지원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 공동으로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추진
 - 국립대 주도로 지역대학 간 학점교류·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고등교육 협업 선도모델 창출을 지원

• 그림 3-2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구축 •



출처 :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 지자체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국립대 지원을 강화
 - 대학재정지원사업 확대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 수립
- 지방대 우수 인재유입을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요건을 개선(강화)
 - 국립대 육성 및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등 국가장학금 체제 개선을 추진
- ②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①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글로벌 지방대 육성, ②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 지원 추진

-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 창출
- 디지털 뉴딜, 지역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 지원
 -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으로 신기술분야 인재 양성 및 3단계 산학협력 선도 대학육성사업(LINC)으로 한국판 지역뉴딜 인재양성 지원
 - 혁신적인 대학-기업-훈련기관이 연계한 K-디지털 훈련모델 구축으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양성
- ③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① 지방대학의 체계적 관리, ② 평생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 추진
- 과도한 정원 외 모집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재정지원 선정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등 지원을 통한 자율경영 개선을 유도 하고, 재정적 한계 대학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등 폐교 절차 체계화
-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사제도 도입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촉진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을 위한 과제로는 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캠퍼스 공간 확대, ②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③ 지역인재 친화적 취·창업 환경 조성 추진
- 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캠퍼스 공간혁신을 위해 ①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청년 친화적인 공간 확대,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 확대 추진
- 광역시 중심에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여 도심융합특구(국토부)+ 지역혁신플랫폼(교육부) 간 연계로 지역청년의 창업·문화·주거공간 확대

- 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대학 유휴교지를 활용한 기업·연구시설 유치 활성화
 - 혁신도시(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 특례 신설을 통해 新교육모델 확산 추진
- ②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혁신주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지원
 - 지역혁신플랫폼을 활용한 지역연합대학원 모델 창출
 - 거점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4단계 두뇌한국(BK)21 내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역량 강화
- ③ 지역인재 친화적 취·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①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 채용 기회 확대, ② 지속적인 역량 개발 및 취·창업 지원 추진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단계적 확대 및 (가칭)지역인재 친화기업인증제 도입으로 지역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유도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대 및 대학 진로교육 기능 강화
 - 대학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고교생 및 재직자 현장 맞춤형 훈련 지원 확대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

-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을 위해 ①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 ② 중앙-지자체 협력 활성화 추진
- ①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①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②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기제 마련 추진
-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장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협업위원회는 2021년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장 단독 또는 대학 총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가능

-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혁신을 추진하도록 추진
-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기제 마련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 대학-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사례 반영 유도
- ② 중앙-지자체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①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총괄조정 기제 마련, ② 상시적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제시
- 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한 지역인재 정책 총괄조정 체계 구축
- 지역인재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가칭)지역인재육성지원센터 지정 운영
 - 교육부와 시·도 간 소통창구 다변화 및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인사교류 활성화

• 그림 3-3 | 중앙-지자체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출처 : 교육부(2021)

• 표 3-2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정책 핵심추진 과제 및 추진 내용 •

구분	추진과제	추진 내용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추진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동력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
	혁신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국제화 추진을 통한 글로벌 지방대 육성 디지털 뉴딜, 지역 뉴딜을 이끄는 혁신인재 양성지원
	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의 체계적 관리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체질개선 지원
지역인재 정책을 위한 지역혁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캠퍼스 공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융합 특구 등 지역청년 친화적 공간 확대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캠퍼스 확대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주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지역인재 친화적 취·창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 채용 기회 확대 지속적인 역량개발 및 취·창업 지원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강화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기제 마련
	중앙-지자체 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총괄·조정 기제 마련 상시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활성화

자료 : 교육부(2021)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정책

1) 전라남도의 대학지원사업 현황

전남의 대학지원사업

- 전남의 대학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부서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공모 사업으로는 ‘대학자율역량 프로그램’과 ‘전라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사업’ 등이 있음

- 대학자율역량 프로그램은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전남지역 대학(8개)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임
- 대학 및 대학생 역량 증대, 지역인재육성, 지역사회 협력기여 방안 등을 주제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
- 전라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지원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2020년 전남지역 9개 대학 30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지원 받음

지역-대학 연계·협력 지원사업

- 전남도의 자체 지방대학 관련 지원사업은 ‘지역-대학 연계·협력 지원사업’이 있음
 - 지역-대학 연계·협력 지원사업은 지역과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임
 - 추진방향은 ① 지역 대학이 인재양성기관의 역할을 넘어 사회봉사 등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지원하며, ②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현안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및 역량 강화 도모하고, ③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 표 3-3 | 지역-대학 연계·협력 지원사업 사업 개요 •

구분	내용
사업예산	300백만 원(2021년 기준)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위치한 대학으로 교육부 지정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사업규모	3개 분야, 총 14개 대학 내외 (세부분야 : 지역바로알기, 찾아가는 창의교육, 지역기반교육)
지원내용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자료 :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2021)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

- 전남도는 2021년 7월, 지역과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8월 지역과 지방대학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T/F)’ 구성
 -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대학이 소재한 9개 시·군 (목포시, 순천시, 여주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 무안군) 등 기관 단체장 간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으며, 실무위원회는 전남지역 주요 대학 기획처장, 도교육청, 전남도 관련 실과장, 시군협의회 대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됨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에 있어 전남 발전을 선도 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는 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제도 개선 발굴, ② 상생협력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임
 - 향후 지역과대학 상생발전 추진단 구성을 통해 대학 재정 지원 확충 및 제도 개선, 특성화 사업³⁾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할 계획

전남의 지방대학 지원조직 현황

- 전라남도에서 지방대학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 육성과임
 - 희망인재육성과는 인재육성팀(6명), 청소년지원팀(4명), 교육지원팀(4명)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업무는 교육지원팀이 담당하고 있음

3) 특성화산업을 통한 인재양성은 전남도에서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및 에너지 신산업의 인재양성임

• 표 3-4 |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인재육성팀 및 교육지원팀 담당업무 •

구분	담당업무
인재육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문위원회(인재육성분과) 운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전남학숙 운영, 평생교육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총괄, 으뜸인재 육성, 해외유학생 선발 지원, 인재육성 도민추진협의회 운영, 미래산업 연구인재 육성사업 지원,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남도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도민행복대학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새천년 인재육성 DB 구축
교육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도장학회 및 남도학숙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교육협력관제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벨캠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운영, 전남 인재학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에 관한 사항, 인성·직업 체험의 날 운영

자료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검색일: 2021. 9. 17)

2) 부산광역시의 대학지원사업 현황

부산시의 지방대학 협력사업

- 부산시 지방대학 협력 사업에는 크게 ① 지역사회 연계 우수인재 육성, ② 산학연 협력 사업 강화, ③ 지역기여 사업이 있음
- 지역사회 연계 우수인재 육성사업에는 부산형 우수인재 육성(BB21+)사업이 있으며, 부산소재 13개 대학 21개 산업단이 참여하며 장학금 등을 지원함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 동아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연계형 직무체험 인턴십 등을 제공함
 - 대학생 학술대회는 부산지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현안문제 및 갈등, 대학 발전방안 등의 주제로 개최됨

• 표 3-5 | 부산시-대학의 주요 협력 사업 •

구분	부산시-대학 주요 협력사업	대상	내용	사업비
지역사회 연계 우수인재 육성	• 부산형 우수인재 육성(BB21+)	• 부산소재 13개 대학 21개 산업단	• 지역연계 과제수행 사업단에 참여 학생 장학금, 과제수행 경비 등 지원	연간 10억 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 소속 학생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 동아대)	• 공공기관 연계형 직무체험 인턴십, 공모전 참여 지원 등	연간 2.55억 원
	• 대학생 학술대회 개최	• 부산지역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지역사회 현안문제 갈등, 대학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	연간 1천 5백만 원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	• 대학 R&D 씨앗기획사업	• 부산 소재 대학 소속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연구기획팀	• 70개 내외 R&D 연구기획 과제 지원	연간 5억 원
	• 시장수요 맞춤형 개방형 연구실 사업	• 부산지역 대학 및 기업	• 지역기업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및 연구실 간 융합연구 지원	연간 15억 원
	• 4차 산업 연계 부산전략사업 인재양성 사업	• 부산지역대학(사업단)/ (교육대상) 부산지역 대졸(예정) 미취업자	• 기업체 연계 수요맞춤형 커리큘럼 구성 및 전문교육, 현장실습, 멘토링 등	연간 2억 원
지역기여	•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 부산지역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	• 지역봉사, 미래인재육성, 지역현안해결 등 사업 지원	연간 3.5억 원

자료 : 부산광역시 교육정보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edu/index>)

- 지역기여 관련 사업은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으로 부산지역 대학, 공공 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지역봉사, 미래인재육성 및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 사업을 지원함

부산시-대학 간 상생협력 지원사업

- 2019년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시-대학 상생·모델을 지원·발굴하기 위한 사업

- 중점 과제는 지역봉사, 지역현안 해결, 평생교육 제공, 지역문화 선도 등이며, 신청 대상은 부산지역 대학 24개교(4년제 15개교, 2년제 9개교)이며, 사업규모는 4억 원임
- 2019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8개 사업이 선정되었음

· 표 3-6 | 2019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 ·

구분	수행대학	주요사업내용
I 유형 (컨소시엄형)	동서대	· 부산 배리어프리존 확대 운영 및 장애인 문화·예술선도
	한국해양대	· 영도구 낚시관광산업 육성지원 및 낚시 문화 선도 등
	부산카톨릭대	· 마을단위 웰다잉 교육사업(오솔길 프로젝트)
II 유형 (특화형)	경성대	· 장애인 무상 스포츠힐링 프로그램 '다함께 차차차' 확대 운영
	고신대	· 부산 싱글노인 대상 '용감한도전' 시니어뮤직 커뮤니티 운영
	동명대	· 부산 중소기업 재직자와 가족의 워라벨(정신건강 향상) 지원사업
	경남정보대	· KIT Community Schools
	동주대	·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

자료 : 부산시 시산학협력단 결과공고문(2019)

· 그림 3-4 | 부산시-대학, 상생·협력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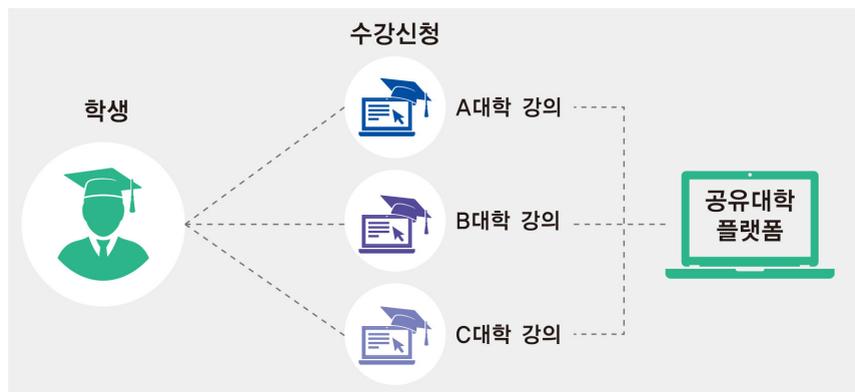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일보, '부산시-대학, 상생·협력모델 만든다'(2019. 4. 11)

부산시-부산권 6개 대학의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사업

- 2020년 부산시와 부산권 6개 대학(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한국해양대)은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⁴⁾
 - 부산시는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공간을 제공 및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참여 대학은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상호협력 프로그램 발굴 기획 등 추진
 - 공유대학 플랫폼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과 지역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전략임

• 그림 3-5 | 공유대학 플랫폼의 개념 •



자료 : 중대신문, '세계 최초 온라인 기반 공유대학 플랫폼 윤곽 드러났다'(2018. 5. 14)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는 2017년 출범한 시-대학 간 거버넌스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논의, 대학협력단 조직 신설, '대학협력관 파견제도' 등 사업화 함

4) 6개 대학이 추진하는 공유대학 플랫폼은 각 대학 LINC+사업단이 주축이 된 모델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는 관련 조례 『제2장 제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는 부산시장, 23개 지역대학 총장·부총장, 부산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의회 6대 주요 상생협력 사업은 ① 공유대학 유니파크(Uni-Park) 운영, ②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③ 대학생 주거 생활 및 활동 지원 ④ 대학 연구개발(R&D)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역량 강화, ⑤ 시-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대학의 지역 기여, ⑥ 유학하고 싶은 도시 부산의 역량 강화임

• 표 3-7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6대 주요 상생협력 사업 •

사업	사업 내용
공유대학 유니파크(Uni-Park)	• 지역대학 교육 온라인 솔루션과 지역 내 다양한 혁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학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지역기여 플랫폼 기능으로 확산·발전시키는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공모사업	• 지자체-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여 사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22개 대학 중 10개 대학 참여
대학생 주거생활 및 활동지원 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
대학 연구 개발(R&D)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역량 강화사업	• 산·학·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호교류 확대 및 산학협력 R&D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고도화하는 사업
시-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기여 사업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대학의 지역 사회 연계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
유학하고 싶은 도시 부산의 역량 강화사업	•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유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

자료 : 부산시 대학협력단 보도자료(2020)

부산의 지방대학 지원조직 현황

- 부산시는 청년산학창업국내 지식학협력과를 통해 지방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음
 - 지식학협력과에는 산학협력팀(7명), 대학협력팀(4명), 인재육성팀(3명), 혁신도시지원팀(5명), 대학협력관(6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지식학협력과에서 총괄하고 있음
- 대학협력팀외에 대학협력관을 별도로 구성하여, 시-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거점대학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표 3-8 |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 지식학협력과 관련팀 담당업무 •

부서	담당업무
산학 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학협력센터 구성에 관련 사항, 지식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관련 사항, 산업교육 및 지식학연협력 기본(종합)계획 수립 • 대학혁신연구단지(I-URP) 조성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 등 • 정부 R&D사업 유치 지원 총괄(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등), 시장수요 맞춤형 개방형연구실 사업 추진, 대학 R&D 씨앗기획사업 추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수립, 독일 FAU 유체역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특성화 산학혁신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대학 펫파크 조성사업 등), 정부 R&D사업 유치 지원 (스마트캠퍼스 챌린지사업), 시-대학 산학협력단장(실무)협의회 운영·지원 •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지원, 정부 R&D사업 유치 지원(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 LINC+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운영, 산학협력 모범모델 발굴 수집·홍보에 관한 사항
대학 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협력팀 주요정책 종합기획·조정, 대학 현안 대응(대학 폐교, 의대정원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 유학생 관리 총괄 •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대정부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건의사항 등,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협의회 운영,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 실무협의회 운영, 대학 총장협의회 운영, 대학협력관(소통관)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지원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유학생 종합서비스 사업 지원(부산국제교류재단), 시-대학 국제교류협력협의회 운영, 신규 입학지원 발굴유치(유학생 등), 대학관련 행사운영(대학 등 현장방문 포함),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지원

부서	담당업무
대학 협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학 현안 지원, 관리, 지역인재 고용영향 평가, 학령인구 추이 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지역혁신플랫폼 공모사업 준비 총괄, 대학 교육혁신 발굴지원 등, 부산형 공유대학 모델개발 연구, 국가 및 지자체 사업간 연계 발굴, 협업기반 조성 및 점검관리 계획 마련 등, 대학의 지역기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대학생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시-대학 상생협력 업무 총괄(학술상점 포함), 소관 대학 소통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관련 행사운영(대학 등 현장방문 포함), 대학 제안사업 리스트 관리(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대학생 학술동아리 지원, 대학생 학술대회 개최, 대한민국 인재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대학교 파견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해양대학교 파견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산학협력센터 파견근무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검색일: 2021. 9. 17)

IV

해외 관련 사례 분석

1. 일본의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

1) 일본 지방대학 정책 배경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 인구감소·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4년 일본 창생회의에서 소멸가능 도시를 발표함
 -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유입이 지속될 경우 1,727개 시구정촌 소멸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을·사람·일자리창생법’ 제정
 -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시정하고 모든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쿄도 대학 진학자 수용력이 약 200%까지 증가했으며, 도쿄 23구내 대학생은 오히려 증가 경향이 나타남
 - 지방대학진흥과 수도권 내 대학정원 억제 정책 이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지방에서의 매력있는 고용창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는 2017년 2월, ‘지방대학 진흥 및 젊은 세대 고용 등에 관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지방창생에 이바지하는 지방대학 실현을 위한 검토회의’를 가짐
 - 관계자 회의는 2017년 5월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2016년 개정판)’(2016년 12월 22일 각의결정)에 의거하여 지방대학의 진흥, 도쿄에서의 대학 신·증설 억제 및 지방

이전 촉진, 지방에서의 고용창출 및 젊은 사람들에 대한 취업지원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⁵⁾

- 지방대학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2015년 개정판)의 기본목표를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삼고 이를 위해 4가지 시책을 정함
 - 4가지 시책은 ‘정부관계기관의 지방이전’, ‘기업의 지방거점기능 강화·기업의 지방 채용 및 취업확대’, ‘지방이주 추진’, ‘지방대학 활성화’임
- 지방대학 활성화 시책은 지방창생종합전략 중에서 지방연계강화 및 지방으로의 인구흐름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단계 지방창생종합전략 중에서는 주로 두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시책임
 - 제1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15~2019)수립 이후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20~2024)이 추진 중에 있음

• 표 4-1 | 제2기 지방창생종합전략(2020~2024)의 기본 목표 및 주요 추진시책 •

기본목표	주요 추진 시책
1. 돈 버는 지역의 실현 및 안정적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산업을 활용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 전문인재의 확보 및 육성 •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취업환경과 담당자 확보
2. 지방과 연계강화와 지방으로 인구흐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주 촉진 • 청년의 교육·취업에 의한 지방정책 추진 • 관계인구의 창출 및 확대 • 지방으로 자금 흐름 창출·확대
3. 결혼·출산·육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육아 지원 • 일-육아 양립 •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추진
4. 사람이 모이고 안심할 수 있는 매력있는 지역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높은 생활을 위한 마을의 기능 충실 • 지역자원을 활용한 개성있는 지역 형성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5) 地方大学の振興及び若者雇用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 2017, 「地方創生に資する大学改革に向けた中間報告」

일본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의 기본 시책

- 지역 주체 간 연계체계 구축
 -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산업계가 연계하여 ‘지역연계 플랫폼’ 구축
 - 지역과 대학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전문인재 육성 및 지역의 중심 산업 진흥
- 지방 특색이 있는 창생을 위한 지방대학 진흥
 - 산관학 연계로 지역산업의 특색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대학의 강점을 살려 학문영역 및 연구분야 강화
 - 도쿄권과 지방대학 학생과의 상호 교류 촉진
- 젊은 세대의 고용창출 및 정착
 - ‘지방대학 진학’, ‘지역기업 취업’, ‘도시 대학에서 지방기업 취업’을 촉진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에 자부심을 가진 교육을 추진
- 지역인재 육성
 - 전문적 직업인재 육성을 위한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및 직업교육 추진

2) 일본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사례

지역연계 플랫폼 구축⁶⁾⁷⁾

- 지역연계 플랫폼 구축은 대학, 지자체,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이 함께 논의의 장을 구축하여 ‘근거’에 의해 현상 및 과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장래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해 연계협력 하는 데 목적이 있음

6) 文部科学省 地域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の構築

(https://www.mext.go.jp/a_menu/koutou/platform/mext_00994.html, 검색일: 2021. 9. 3)

7) 文部科学省, 2020, 「地域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仮称)構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ポイント)案」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25-mxt_koutou01-000006162_07.pdf, 검색일: 2021.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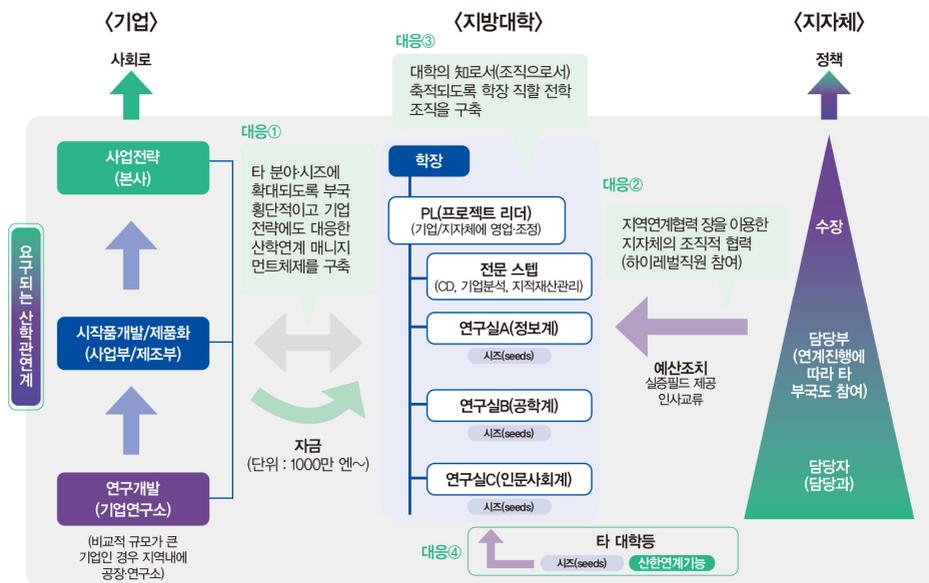
- 대학에서는 지역니즈를 도입한 교육연구의 활성화와 대학 간 연계의 추진, 대학의 지역에서의 존재가치를 향상
- 지자체는 대학의 지(知)와 인재를 활용한 과제해결, 역내 젊은 세대의 정착촉진, 지역 경제기반 강화와 사회유지 가능
- 산업계에서는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인재육성과 공동연구에 의한 활성화, 매력적인 고용의 유지·증가 가능
- 지역연계 플랫폼의 참여주체는 대학, 지자체, 산업계 등이며, 대상지역은 도도부현 등 행정단위, 생활·경제권, 도도부현을 넘어 광역 블록 등
 - 지역연계 플랫폼은 논의의 장, 기획 입안, 실행조직 등 역할분담, 코디네이터, 사무국 등의 기능을 함
 - 예산은 참여조직에서 회비 징수나 정부 프로젝트 예산, 기업판 고향 납세 제도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함
- 지역연계 플랫폼에서 공유·논의·실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지역고등교육 기회와 인재확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과제해결과 지역 진흥,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가 있음

8) 기업판 고향납세 제도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방 창생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거리·사람·일 창생 기부 활용 사업”에 기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의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

• 표 4-2 | 지역연계 플랫폼 공유·논의·실행 사항 •

<p>지역 고등교육기회와 인재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비전공유, 이해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지역산업의 비전 등 - 지역고등교육이 다하는 역할의 재확인 등 지역 현상·과제의 공유와 장래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시 등의 인구동태, 지역사회·산업구조, 장래예측을 포함한 논의
<p>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과제해결과 지역진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의할 수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에서의 공통적인 목표, 방향성 확인 - 목표 등을 고려한 행동계획, 지역과제의 해결책 - 지역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
<p>지역사회 유지·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해결을 위해 실행하는 사항(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제해결형의 실천적인 교육프로젝트 제공 - 산업진흥, 이노베이션 창출 - 대학 등 진학률(특히 여내 진학률)과 여내 정착률 향상책 - 외국인 유학생 수요와 사회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그림 4-1 | 지역연계를 통한 지역과제 대응체제 •



출처 : 文部科学省 科学技術·学術政策局 産業連携·地域支援課 地域支援室(2021), 「共創の場形成支援プログラム(地域共創分野)について」, 文部科学省⁹⁾

지방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COC+)

- Center of Community(이하 COC) 사업은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임
 - COC사업의 주된 목적은 ‘지역재생 및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 형성’임
 - 반면, Center of Community Plus(이하 COC+) 사업은 자체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취업처 창출 등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지방창생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지방 이주 추진
 - COC+사업은 지역의 니즈와 대학의 시즈¹⁰⁾를 일치시켜 지역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COC 사업과 목적이 같으나 COC+ 사업은 지역 주체들과의 연계를 강조함
 - COC+ 사업은 지자체, 기업, NPO, 민간단체들이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육성을 추진함
- COC+ 사업의 요건을 만족한 대학은 지역과 협업하여 인재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COC추진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도도부현 내 타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 사업협업기관을 확대함
 - 사업협업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교육·연구·사회공헌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지자체와 대학 등은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¹¹⁾를 설정하고 고용창출이나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COC+ 사업기간은 2015~2019년이며, 보조기간은 최대 5년임
 - 총무성이 지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조치를 통해 지원하고, 문부과학성은 대학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원함

9) https://www.mext.go.jp/content/20210119-mxt_sanchi01-000012164_2.pdf(검색일: 2021. 9. 3)

10) seeds: 교육·연구·사회공헌

11) 대학졸업생 현내 취업률, 공동연구에 의거한 신사업으로 창출한 고용자수 등 구체적인 수치 설정

• 표 4-3 | COC+ 사업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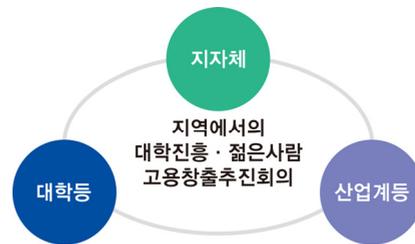
구분	내용
보조금	• 1건당 68,000천 엔
COC+사업 선정 현황	• 56건 신청 중 42건 선정
사업신청 대학	• 국립 36개 대학, 공립 4개 대학, 사립 2개 대학
사업참여 학교	• 194개 대학, 31개 단기대학, 31개 고등전문학교, 계 256개 학교

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 사업

- 2018년부터 시작된 내각부 지방창업추진 사무국이 추진하는 사업
 - ‘지방대학·산업창업법¹²⁾’에 따라 수장의 리더십으로 지역 중심적 산업진흥을 위해 산관학이 연계해서 당해 지역에서 특색이 있는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이루려고 하는 지자체를 중점적으로 지원
 - 지역산업창업의 구동력이 되고 특정분야에 압도적인 강점을 가진 ‘빛나는 지역대학 만들기’를 추진

• 표 4-4 | 교부금 사업 개요 •

- 조직레벨의 산관학 연계체제 구축
- 연구개발과 전문인재육성의 일체적 추진
- 해외연계 등을 통한 연구력 강화
- 특색이 있는 대학(학과 재편성)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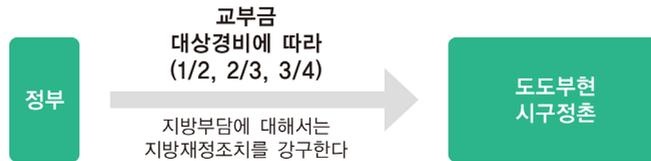


- 교부금사업은 지자체 등이 설정한 KPI를 정부 관계자자위원회가 평가하며 매년 검증하고 PDCA사이클을 실시

12) '지역에서의 대학진흥 및 젊은 사람 고용기회 창출에 의한 젊은 사람의 수학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 2018년 6월 공포·시행

- 평가위원과 사무국 등이 약 6개월간 신청단체에게 조언하는 계획작성 지원을 실시
- 2020년도의 예산액은 총 97.5억 엔임¹³⁾

• 그림 4-2 | 교부금 지원 •



출처 :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 2021, 「地方大学·産業創生交付金事業について」, 内閣府

젊은 세대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역 학생 정착 사업

- 젊은 세대에 대한 고용창출과 지역 학생 정착 사업에는 ‘장학금 반환에 관한 학생지원 사업¹⁴⁾’과 ‘지방정착 사업’이 있음
- 먼저, 장학금 반환에 관한 학생지원 사업은 총무성이 2015년 4월 제정한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 등의 지방정착촉진 요강¹⁵⁾’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임
 - 지자체와 지역산업계가 협력해서 기금을 조성, 학생들의 장학금 반환을 지원함
 - 이 사업의 지자체 출연(出捐)분은 정부가 특별교부세조치를 통해 지원함
 - 일본학생 지원기구(JASSO)¹⁶⁾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고용창출·젊은 세대의 지방정착 사업은 총무성이 2015년 4월에 제정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의한 고용창출·젊은 세대 정착촉진 요강¹⁷⁾’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13) 내각부: 지방대학·지역연계창생교부금 22.5억 엔,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 50.0억 엔, 문부과학성: 25.0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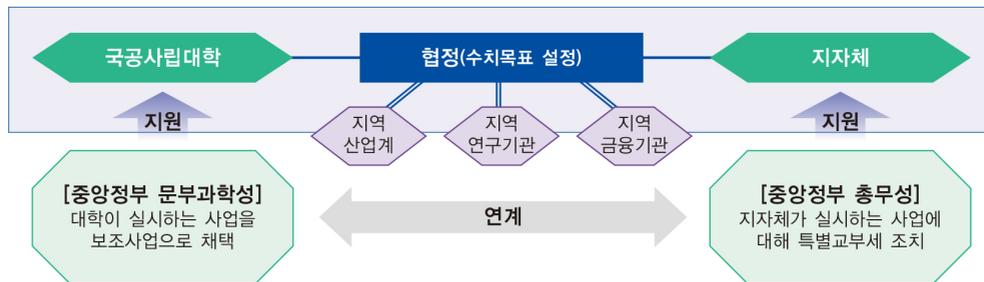
14) 일본의 학자금 제도 중 일본학생지원 기구(JASSO)의 장학금은 학생들이 자립하고 배우도록 지원하고 졸업 이후 환수하는 대출형 장학금임. 장학생이 졸업 후 반환하는 돈은 다음 세대의 장학금으로 쓰임

15) 総務省, 「奨学金を活用した大学生等の地方定着促進要綱」, 総務省自治財政局, 2015년 4월 10일 제정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353689.pdf, 검색일: 2021. 9. 10)

16)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 지원기구(日本学生支援機構) 홈페이지(<https://www.jasso.go.jp>)

- 이 사업은 문부과학성과 총무성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대학 등이 협정을 체결해 함께 추진함
- 문부과학성은 대학이 실시하는 고용창출·젊은 세대 정착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총무성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고용창출·젊은 세대 정착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그림 4-3 |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연계 고용창출·젊은 세대 정착 촉진사업 •



출처 : 文部科学省, 「地方大学を活用した雇用創出 若者定着」¹⁷⁾

• 표 4-4 | 특별교부세 조치 대상 사업(대학사업과 지자체 사업) •

대학 사업	지자체 사업
[입학 시 대책] ICT와 새틀라이트 캠퍼스를 이용한 도시부 대학과의 학점 호환을 통해 지방대학 입학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진학자에게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시부 대학수업을 ICT와 새틀라이트 캠퍼스를 이용해 수강·학점수득 할 기회를 제공(단위 호환으로 재학한 지방대학 학점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 공간 제공(시설 차용) • 통신비 등 증가경비에 대해 일부 부담(통신비 등)
[취업시 대책] 지역기업과의 관계강화에 의한 지역기업과 학생의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계와 연계한 지역기업에서의 장기 인턴십을 실시하는 등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 (필수과목화 학점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지역기업 간의 연락조정(교통비, 자료작성비 등) • 인턴십 수용 기업 개척(교통비 등) • 인턴십 학생의 수용(인턴십 학생 교통비, 숙박비 등) • 지역산업계에서 대학으로 강사파견 지원(강사 파견비)

17) 総務省, 「奨学金を活用した大学生等の地方定着促進要綱」, 総務省自治財政局, 2015년 4월 10일 제정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353689.pdf), 검색일: 2021. 9. 10)

18)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地方大学を活用した雇用創出 若者定着」
 (https://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coc/_icsFiles/afifile/2015/04/17/1356659_03_1.pdf, 검색일: 2021. 9. 10)

대학 사업	지자체 사업
[산업진흥] 지방대학, 지자체 및 지역기업의 공동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지역 브랜드상품·고유산업 기술의 개발, 지역산품의 6차 산업화, 산품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에 관해 연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가 설립한 연구시설(산업기술센터 등)에 의한 공동연구(공동연구비 등) 연구개발 위탁(대학으로 연구비 지원) 대학과 지역기업 간 연락조정(교통비, 자료작성비 등) 판로개척 지원(물산전 출품 등의 교통비, 홍보비, 장소 차용비 등) 마케팅 지원(마케팅을 위한 위탁조사비 등)

주 : * ()내는 상정되는 경비

출처 : 総務省, 「地方公共団体と地方大学の連携による雇用創出 若者定着促進要綱」, 総務省自治財政局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추진 사업¹⁹⁾

- 대학 리커런트 교육 추진사업은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정규 고용노동자·실업자, 원하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을 지원
 -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경제단체 등 지역 주체가 연계해 리커런트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 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수강자의 취업·전직을 지원
 - 2개월부터 6개월의 단기간 교육으로 취업·이직에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수강자에게 무료로 제공
 - 의료·간호, 지방창생, 여성적용직업을 중심으로 기초부터 응용까지 22개 도도부현에서 63개의 프로그램이 있음
- 대학 리커런트 교육 사업에는 A~C의 3가지 코스가 있으며, 이 중 A코스와 C코스는 지역인재교육과 관련되어 있음
 - A코스는 지역과 기업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강자를 취업하게 하는 코스로 후생노동성이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직업훈련수강급부금²⁰⁾’의

19) 文部科学省 홈페이지, '就職 転職支援のための大学リカレント教育推進事業'

(https://www.mext.go.jp/a_menu/ikusei/manabinaoshi/mext_01127.html, 검색일: 2021. 9. 20)

20) 세대 수입과 자산이 특정 기준 이하로 공공직업소개소에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매 달 10만 엔씩 지급한다는 구직자 지원제도

수급대상이 되며, 프로그램 총 시간은 한 달 60시간 이상,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임

- C코스는 비정규 고용노동자, 실업자, 원하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전직 희망자, 기업(起業)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프로그램개발을 가능케 한 코스로 프로그램 총 시간은 60시간 정도임

• 표 4-5 | 사업진행중인 대학 수와 코스 수 •

구분	대학 수	프로그램 수			
		총 수	A코스	B코스	C코스
국립	17	24	7	12	5
공립	2	2	1	1	0
사립	21	37	11	18	8
계	40	63	19	31	13

• 표 4-6 | 대학 리커런트 교육 프로그램 •

코스	대학 구분	도도부현	대학명	프로그램 명
A	국립	지바(千葉)현	지바대학	• 지역 밀착과 ICT활용으로 코로나화를 극복하는 의료·간호 스태프 리커런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실시
	국립	나가노(長野)현	신슈(信州)대학	• 농업·음식·복지를 연계한 취업·전직 프로그램
	사립	나가사키(長崎)현	진제이(鎮西)학원대학	•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투어리즘을 견인하는 관광 호스피탈리티·매니지먼트 인재양성 프로그램
B	국립	사가(佐賀)현	사가대학	• 산과(産科)·지역 모자 보건분야의 조산사 부족·편재를 해결하기 위한 참재 조산사 리커런트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사립	아이치(愛知)현	일본복지대학	• 지역공생사회에서의 복지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 리커런트교육 추진사업(단기집중 코스)
	사립	아오모리(青森)현	하치노헤(八戸)학원대학	• 젊은이·여성 활약 추진 재출발 지원 프로그램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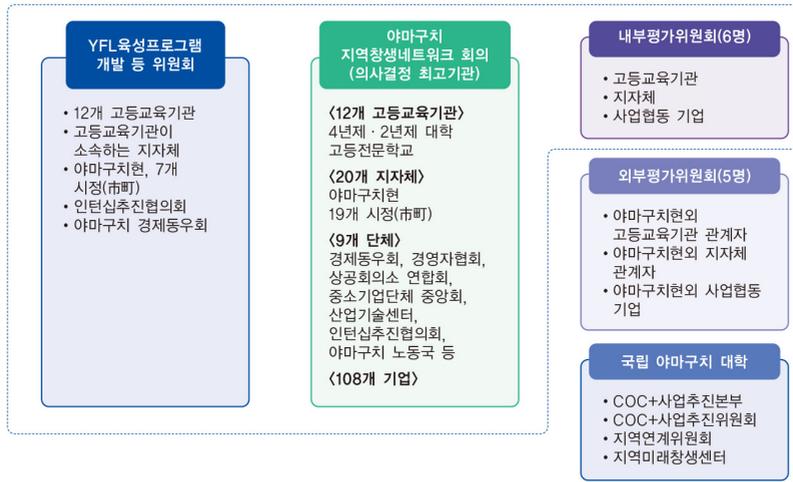
야마구치(山口)현 야마구치(やまぐち) 미래창생인재육성·정착촉진 사업²¹⁾

- 야마구치현 미래창생인재육성·정착사업은 야마구치지 야마구치(山口)현의 지방거점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COC+)임
 - 2015년부터 5년간 국립 야마구치대학을 거점으로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등 12개 고등교육기관, 야마구치현, 20개 지자체, 8개 경제단체, 18개 현내 기업의 총 58개 기관이 참여
 -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상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대학이 지자체와 기업 등과 협업하여 참가기관 학생의 지역 취업률 10% 향상을 목표로 함(이 중 10%는 기업에 의한 신규 고용창출 실현)
- 야마구치현 사업의 운영주체는 ‘야마구치 지역창생 네트워크 회의’, ‘YFL(Yamaguchi Frontier Leader)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 위원회’, ‘야마구치 대학’, ‘내부·외부 평가 위원회’로 구성됨
 - 야마구치 대학 내에 ‘COC+사업본부’, ‘지역미래창생 센터’, ‘COC+사업추진위원회’, ‘지역연계위원회’를 설치
 - 야마구치 지역창생 네트워크 회의는 사업 실시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기관으로 12개 고등교육 기관, 20개 지자체, 9개 단체, 108개 기업(2017년 3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음
 - YFL 육성프로그램 개발 위원회는 각 대학의 교육 자원 파악 및 타 대학에 제공하며,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의 자질·능력을 분석·검증(니즈조사, 집계 등)함

21) 国立大学法人 山口大学 홈페이지, 2015,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 COC+ “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 平成27年度 事業報告書」
http://www.yamaguchi-u.ac.jp/var/rev0/0004/5250/H27_houkoku.pdf, 검색일: 2021. 9. 6)
 国立大学法人 山口大学 홈페이지, 2016,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 COC+ “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 平成28年度 事業報告書」
http://www.yamaguchi-u.ac.jp/var/rev0/0004/5251/H28_houkoku.pdf, 검색일: 2021. 9. 6)
 山口県 홈페이지,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COC+)の概要」
<https://www.pref.yamaguchi.lg.jp/cmsdata/5/c/d/5cd709c71c27c43d029f282198610da9.pdf>, 검색일: 2021. 9. 6) 등을 참고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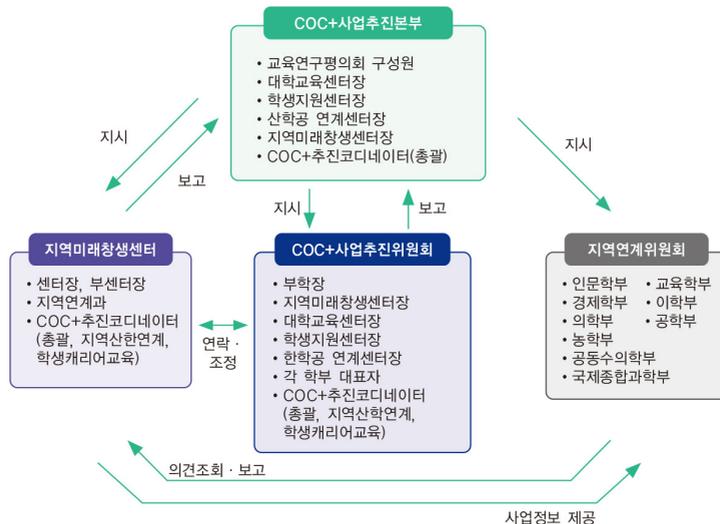
- 또한 아마구치 지역창생 네트워크회의에서 제시한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하며 취업지원 등 정책에 관해 검토함

• 그림 4-4 | 아마구치현 COC+사업 운용체제 •



출처 : 国立大学法人 山口大学 홈페이지, 2016,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 COC+ “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 平成28年度 事業報告書」

• 그림 4-5 | 아마구치 대학 COC+사업 체제 •



출처 : 国立大学法人 山口大学(2016),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 COC+ “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 平成28年度 事業報告書」

- 야마구치 대학은 ‘COC+사업본부’, ‘COC+사업추진위원회’, ‘지역연계위원회’, ‘지역미래창생센터’의 4가지 조직과 3명의 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
 - COC+사업본부는 학내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조직이며, 사업 전반에 관한 학내 방침을 결정함
 - COC+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교환·연락 등 업무와 학내 체제정비에 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시행안을 작성함
 - 지역연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관한 학부 내 체제정비 및 사업시행을 위한 대응을 하며, 각 학부장을 수장으로 하여 COC+사업추진위원회의 각부 대표자 및 각 학부 취업담당교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미래창생센터는 사업에 관한 상담창구로 협업기관과의 연락·조정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의견 취합과 공정한 관리 등을 수행함

- 코디네이터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지역산학연계 코디네이터’, ‘학생 커리어 코디네이터’의 3가지 코디네이터가 있음
 - 총괄 코디네이터는 각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파악·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 협업기관 간의 조정, 본 사업전체의 진척상황관리와 매니지먼트 실시하고 사업 계획의 상세안, 예산안 작성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함
 - 지역산학연계 코디네이터는 지역기업의 니즈를 파악 및 대학연구 시즈(seeds)과의 매칭 조절하며, 기업니즈 파악 시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생자질, 능력 등에 관한 정보수집함
 - 학생커리어 코디네이터는 YFL육성프로그램 전반을 매니지먼트 협업학교와 협업 기관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각종 조정 및 관리하며, 인턴십 등 산학연계교육을 기획·운영함

- 야마구치 미래창생인재육성·정착촉진 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야마구치 미래창생 리더 육성 프로그램’과 ‘야마구치 취업지원 매칭 시스템’, ‘학생 취업지원’ 등이 있음

- 먼저, 야마구치 미래창생 리더 육성 프로그램은 야마구치현 내 대학, 단기대학, 고등 전문학교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 1학년: 아마구치현의 역사·문화·경제·산업 등 교육을 통한 지역에 대한 이해
- 2학년: 사업협업기관의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합동합숙형 필드워크 및 협업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
- 3학년: 기업과 지자체의 인턴십 및 아마구치현 내 취업 연계

• 표 4-7 | 아마구치 미래창생 리더 육성 프로그램 목표 •

구분	상세내용
1. 아마구치 정신	지역행정·경제·역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2.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한 시점에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대하는 능력
3. 이노베이션 창출력	각종 정보를 활용해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능력
4. 협업력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5. 과제발견·해결력	스스로 출현해서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6. 도전·실천력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 두 번째, 아마구치 취업지원 매칭 시스템은 취업 시, 학생과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 학생이 가진 능력과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매칭
 - 지역이 요구하는 6가지 능력을 ‘능력기반형 교육과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치화·도식화하며, 채용정보를 일원화하고 기업정보를 제공함
- 세 번째, 학생취업은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NPO 등과 협력하여 취업처에 관한 정보제공 및 학생과 직장인과의 교류·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활약하는 기업인 등의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 지자체가 추진하는 젊은 세대 정착촉진 시책과 연계하면서, 젊은 세대의 기업(起業) 지원,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직장, 현 내 기업 지원 등 연계

• 그림 4-6 | COC+사업 로드맵 •

분류	번호	사업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YFL 육성 프로그램	1	YFL육성프로그램개발위원회 및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	연 세번 개최(기본적으로 4월, 9월, 2월)					
	2	수업설계교재개발	준비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개정 등 작업실시				
	3	강의실기 등 실시	시행	학생들에게 본격적인 제공				
	4	e-러닝	실시 준비	과목의 본격적인 제공과 개선				
	5	PBI과목 실시에 관련된 사업	PBI과목 수용처 개척, 시행		본격적인 실시			
	6	FD-SD 연수	각 교육기관에서 FD-SD 연수(연 1회 이상 실시)					
취업 지원	7	아마구치 취업지원 매칭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본 설계구축	사용	본격적인 이용			
	8	아마구치 취업지원 매칭 시스템에 데이터 집적	준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과 경신 계속 실시			
	9	인턴십 관련	수용준비(노우하우제공 등)		인턴십 사업 확대			
COC + 사업 운영	10	COC+추진 코디네이터	인선채용	COC+추진 CD의 각종 활동사업활성화				
	11	아마구치 지역창업 네트워크 회의 및 사업전제에 관한 사항	연 2회 개최(기본적으로 10월, 3월)					
	12	COC+사업 내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각종 위원회 및 사업개선에 반영					
	13	COC+사업 외부평가위원회	●	●	●	●	●	
	14	아마구치 지역공청(共創) 포럼	개시 ◆	◆	◆	◆	◆	
15	지립화를 위한 실시작업	지립화를 위한 정보수집		과제 등 검토	지립화 시행			

출처 : 国立大学法人 山口大学 홈페이지, 2016,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 COC+ “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 平成28年度 事業報告書」

시네마현의 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 사업 TATARA 프로젝트

- 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 사례에는 시마네현, 첨단금속소재 글로벌거점 창출 (Next Generation TATARA Project)이 있음
 - 고부가가치제품을 세계에 공급하는 특수강 관련 사업과 시마네 대학이 연계하여 첨단금속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항공기, 모터 산업 등)
- 다타라(たたら)제철의 전통을 이어받은 특수강산업 클러스터(히타치(日立)금속, 중소기업 그룹 SUSANOO 등)과 시마네 대학, 마츠에(松江) 고등전문학교 등이 연계

- 시마네 대학 내 설립한 차세대 다타라협창(協創)센터에 옥스퍼드대학의 Roger Reed 교수를 센터장으로 세우고, 항공엔진과 세계최고 고효율 모터에 사용되는 첨단금속 소재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전문인재육성 실시
 - 이에는 산학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하였고 ‘첨단금속소재의 중심 “시마네”’를 창출
 - 시네마현 전역에 퍼져 있는 주물, 금속가공 등 관련 산업에 파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
- 시마네 대학 종합이공학부에 ‘재료공학 특별코스’를 설치하여 연구실 조기 배치나 옥스퍼드 대학으로의 유학이 가능하게 함

2. 미국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유형별 대학-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

-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재정지원의 주체에 따라 크게 연방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대학 주도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연방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은 하향식(top-down)방식이지만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보장
 -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개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단체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
- 두 번째, 대학주도의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제해결이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함

• 표 4-8 |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유형 •



자료 : 류연택·정희선(2007)

- 연방정부 차원의 대학-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에는 대학파트너십기구(Office of University Partnership: OUP) 프로그램, 지역사회봉사협력센터 프로그램(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 COPC), 지역사회개발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프로그램이 있음
 - 세 가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산하 주택도시개발부(HUD)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학파트너십기구 프로그램(OUP)은 소수민족(minority) 교육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1994년 창설됨
 - OUP는 대학이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개발과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지역사회 소수민족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소수민족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예방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봉사협력센터(COPC) 프로그램은 대학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파트너로 함께 활동하도록 함
 - 직업훈련, 창업지원, 교육, 질병·범죄·환경훼손, 주택문제해결 등 다양한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대학 강좌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 COPC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 봉사협력 활동, 정보교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지역사회개발보조금(CDBG)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것으로 HUD가 주정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CDBG는 미국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재원임
 - 지원대상은 주(state),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카운티(urban county), 인구 5만 명 이상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포함되며, CDBG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통합계획(consolidated plan)을 수립하여 HUD에 지원해야 함
 - CDBG 기금의 70%이상은 반드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함
 - CDBG 기금의 사용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주민회의 개최,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내용 공개 등의 시의적절한 처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학차원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이 속한 지역의 문제해결 및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개발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과 펜실베이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있음
- 존스 홉킨스 대학은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일찍 시작한 대학들 중 한 곳으로 1876년 최초의 NGO인 '자선단체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설치함
 -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교수-교직원-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활성화, 장단기 자원봉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운영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미국 내에서의 표준형 모델로 간주되고 있음
 -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교육분야, 보건분야, 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음악·직업·대학입시교육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분야 지원사업, 신교육 프로그램 연구·평가, 학교조직·교육개혁, 교사훈련 심화과정 등의 교육관련 프로그램도 개발²²⁾하고 있음
 - 보건분야로는 마약, 폭력, 에이즈 등 보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저소득층 근린지구에서 지역사회 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Live Near Your Work'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 캠퍼스 주변 볼티모어 근린지구의 주택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그 밖에 지역사회 서민층 구제를 위한 기부프로그램인 '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NGO와 캠페인 활동 등을 하며, 지역의 안전·보완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펜실베니아 대학(CCP)은 지역사회인 웨스트 필라델피아의 사회·경제적 자본의 감소와 함께 쇠퇴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들과 적극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펜실베니아 대학은 1992년 지역사회파트너십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 지역사회 파트너십센터(CCP)를 설립하였으며, CCP를 통해 교육기반 지역사회 서비스에 집중함
 - 펜실베니아 대학,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종교기관, 공립학교 등 민주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협조관계를 형성함
 - 또한 1960년대 이후 필라델피아의 지역 인구 및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의웨스트필라델피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단체, 초·중·고등학교 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함
 -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1959년 필라델피아 파트너십을 설립하였으며, 1981년 지역사회단체, 근린 지구 조직, 사업체들 간 협력을 통해 고용창출운동, 개선사업단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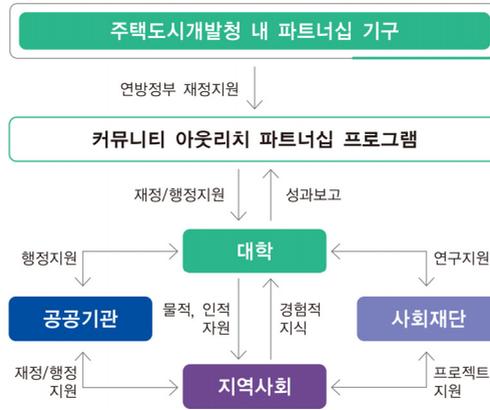
22) "Hopkins's Success for All"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초등학교의 제반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음(Goldring and Sims, 2005; 류연택·정희선, 2007)

- 1985년부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학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봉사서비스' 교과목들을 개설함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트너십 프로그램

- 1992년 연방정부의 시범사업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지역재생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5년)이며, 1994년부터 주택도시개발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관리함
-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과거 정책주도형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의 실패에 따라 도시주택개발청이 발족한 HOPE VI 프로그램임
 - 50~60년대 미국은 도시재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슬럼지역을 철거하고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건설하였음. 그러나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은 오히려 범죄 및 쇠퇴를 가속화키는 결과를 초래함
 - 정책주도형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의 실패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2년 도시주택개발청은 HOPE VI 프로그램 발족하여 중저층 계층 혼합형 주거지(Mixed-Income Housing) 재개발을 진행함
 - 특히, 슬럼지역에 인접한 대학들(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 캠퍼스, 시카고 대학, 일리노이 공대 등)은 지역사회의 공간적·사회적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캠퍼스의 치안문제, 학생유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슬럼지역의 재개발을 주도함
-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대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법을 도모 하고, 지역주민(단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함
 -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 '대화' 및 '협력'을 강조함
 - 대학은 지역사회와 대화 및 협력을 통해서 취업기회 확대나 노숙자 지원 및 지역 사업활동 강화 등 지역 문제를 적합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주민들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대학은 이를 지원

• 그림 4-7 |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계 •



자료 : 김지은(2010)

- 정부는 지역발전의 혜택이 지역사회와 대학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재정 지원
 - 지역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패턴이 다르고, 대학의 구조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연방정부가 지원함
 - 지역의 범위나 프로젝트 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탄력적 운영을 원칙으로 함

• 표 4-9 | 대학-지역사회 협력 주요 프로그램 •

분야	프로그램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해소를 위한 상담지원 및 직업교육 • 창업과 관련된 재정상담 및 기술 지원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주민 리더십 강화 관련 교육 및 기술적 지원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구매/관리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 노숙자 문제 해결 • 저렴주택 개발계획 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수업과정을 대학 내 개설
지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비전 개발 및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김지은(2010)

UIC 지역협력프로그램

- UIC 지역협력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 도시정책 간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 지역협력프로그램(UICNI)은 1993년 설립된 대도시연구소 산하기구로, 대학-지역 사회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재생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커뮤니티 이웃리치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통해 UIC에 인접한 마을인 니어 웨스트 사이드(Near West Side)와 필슨(Pilsen)의 지역단체들과 지역재생 전략을 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함
 - 두 지역은 저소득층 마을로서 사회적·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도심 근무자 주거 만족을 위해 개발업자들의 주택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요구가 공존함
- 특히, UIC는 도심에 위치한 대학으로 과거 지역주민과의 대화·협력 없이 진행한 캠퍼스 개발로 UI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짐
 - UIC캠퍼스의 위치는 1950년대에 정부기관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암암리에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던 해리슨-홀스테이(Harrison-Halstead Street) 일대로 1960년대 초 당시 시장인 리차드 데일리(Richard J. Daley)는 지역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고 중산층과 근로계층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를 위해 토지를 캠퍼스 개발 용지로 전환하여 개발함
 -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캠퍼스 개발은 지역사회에서 UI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진 계기가 됨
- 이후, UIC는 1991년 제임스 스투켈(Janes Stukel) 총장 부임 이후, 변화하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재정립
 - 지역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시카고 및 세계 대도시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역사회와 공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

- 대학 교수진과 및 학생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간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젝트로 1994년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부터 58만 달러를 지원받아 지역재생 프로젝트 수행
- UICNI는 UICNI 주도하에서 두 지역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협력과정을 통해 계획대상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계획방식을 취함
- UICNI의 대학-지역사회협력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는 오랜 기간 쌓여온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었음
 - 독립적 성향이 강한 대학 조직의 특성과 대학을 파트너로 하는 지역단체들의 불안의 공존으로 UICNI는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방식을 채택함
 - 하향식 목표달성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상호 합의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계획²³⁾하기로 하였으며, 이해관계집단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문단(교수진과 지역사회 대표들)을 구성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함
- UICNI의 대학-지역사회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는 UICNI, TRP, 멕시코 현대미술재단의 협력하에 운영된 플레이웍스(Placeworx)가 있음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플레이웍스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방과후 프로그램(15주 과정)으로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됨
 -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
 - 지역학생들과 UICNI 연구자, UIC 도시계획 및 정책학과 대학원생, 멕시코 현대미술재단 스텝 등이 함께 그룹토론을 하여 스스로 지역문제와 관련된 주제 결정 후, 프로그램 종료 후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함으로써 이들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함
 - 플레이웍스는 토론, 발표준비, 공개발표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저소득층 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함

23) 점진적 계획과정은 4단계로 ① 협력을 통한 계획방식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 ② 참여주체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 마련, ③ 참여주체들의 역할, 자원 확보, ④ 협력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참여주체 각각의 내적 변화 및 상호 조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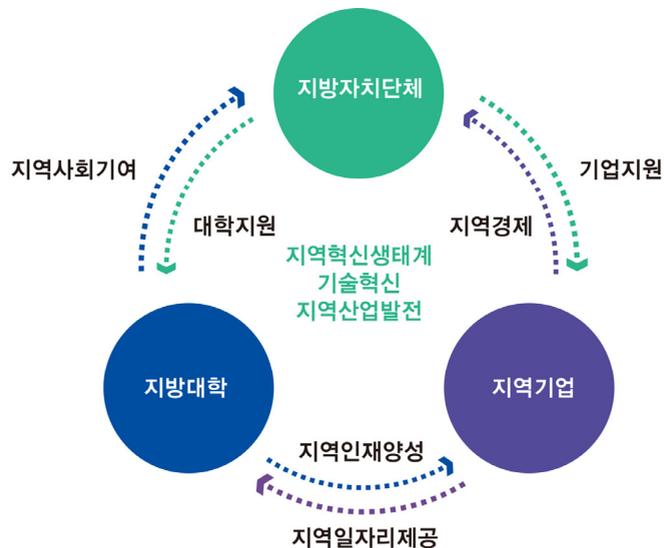
지자체-지방대학 상생협력방안

1. 기본방향

지역주체 간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혁신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발전과 성장 촉진에도 기여하므로, 지방대학의 육성은 지역 기업 간의 연계도 고려한 지역혁신 생태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함

• 그림 5-1 | 지자체-지방대학-지역기업 간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육성에 앞서, 무엇보다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방대학 육성의 관점은 해당 지역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
- 지방대학 육성이 단순히 고등교육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지방대학이 중요한 혁신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임
 - 과거 소비주체로서 경제활동만 하던 대학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의 생산주체로서 연구개발 기능을 주도해가며 지역혁신체계의 핵심주체가 되어가고 있어 지역혁신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
-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지역혁신 생태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있음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참여정부 이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전략은 지방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이 지역산업에 투입됨으로써 인구의 지방 정착에도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
- 이러한 선순환 체계가 이어져가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양성한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산업에 취·창업하여 지역에 정착해가야 하는데, 현재 지방의 위기는 지속적인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않은 문제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음
 - 지방대학의 지역인재가 지역산업에 투입되는 연결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지원할 근거가 희박할 수밖에 없음

-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한 역할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함
- 지방대학이 고등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기 앞서, 지방대학 스스로 지역혁신의 일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전북의 지방대학 지원체계 강화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고등교육 지원정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정책, 지역일자리정책, 지역사회정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지원되어야 함을 뜻함
 - 부산광역시와 대학지원 업무를 청년산학창업국 산학협력과에서 지방대학 협력을 지역산업 협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임
- 광역시에 비해 대학수가 적다고 하나, 전북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도 지방대학과의 연계는 필수적인 바, 대학협력 업무와 산학협력 업무가 별도로 추진되기 보다는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전북은 대학지원사업을 다양한 유관부서에서 수행하여, 산학협력 및 대학협력을 총괄하는 부서가 부재한데, 향후 산학 협력에 대한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1) 지역주체 간 연계체계 구축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기반 활성화로 산관학 상시적 연계 강화

- 교육부(2021)가 제안하고 있는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 방안은 지역 간 협업 기반보다는 중앙-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추진에 초점이 있음
 - 지자체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 협업기반 구축 관련 시책으로 마련된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기구로 기존 지역 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
- 2021년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장 단독 또는 대학 총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혁신 방향을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은 수직적 협력체계 공고화에 초점이 있음
 - 즉 각 시도의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 간 협업 기반보다는 사회관계장관회의-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시도 지역협업위원회로 연계되는 중앙-지자체 간 수직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에 가까움
-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다면,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기반 구축이 먼저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야 함
- 전북을 포함한 각 시도는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등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대학 총장, 산업체 및 연구기관 관련 인사, 기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역단위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부산광역시시의 경우, 이 조례에 책무 및 기금 등을 신설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무 또한 강조하고 있음

• 표 5-1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구분	내용	비고
제1조 목적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책무 규정을 두어 예산 지원 근거 및 기업 등의 역할 강조
제3조 기본계획	부산광역시장은 5년마다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4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를 둠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됨 ③ 협의회의 위원은 청년산학창업국장과 다음의 각호 위원으로 구성 1.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2. 부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 3.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또는 산업체의 대표 4. 부산지역 소재 전문 연구기관의 장 5.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2017년 개정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아닌 시장 등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임명
제19조 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을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 보조금 2.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등	기금으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1. 10. 31)

- 현실적으로 전북도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의 경우, 협의회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위촉직 위원은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인사 등으로 총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인 산관학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인재육성 및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공론화 장 마련

- 법령상의 협의회와 별도로 지방소멸위기와 맞물린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혁신 주체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긴급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남도는 2021년 8월, 지역과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T/F)’ 구성하여 지방대학 위기에 있어 전남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에 협력
- 전남의 상생협력협의체는 지역-대학의 두 주체만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지역혁신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 주체들도 함께 공론의 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 지자체-대학-지역기업 간 상생협력협의체의 구성은 지역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지역인재 양성 및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관학의 세 지역의 혁신주체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함
 - 즉 대학의 지역인재양성, 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착 지원 등 각 주체의 역할에 따른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은 각 주체들의 인식 공유와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대학의 입장만을 듣는 자리가 아닌, 지역인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애로 사항도 함께 청취할 수 있는 협의체로 운영해야 함

- 전북 도 차원에서는 (가칭)지역인재육성 상생협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지역인재육성 상생발전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전북 도차원의 지자체-지방대학-지역기업 간 지역혁신 생태계 육성 지원

- (가칭)지역인재육성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도 차원의 (가칭) 지역인재육성 상생발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지자체-지방대학-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도차원의 지원 업무가 강화되어야 함
- 교육부(2021)가 발표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의해서도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즉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대학혁신 이외에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이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대학을 포함한 지역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
- 현재 지방대학 지원업무는 자치행정과내 인재평생교육팀이 주관하고 있는데, 평생 교육, 교육환경개선, 전북형 행복학습 관련 업무가 주업무이며, 지방대학 관련 업무는 1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지방대학 관련 업무 또한 지자체-지방대학 협력 및 상생발전 사업 및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대학 연계 사업만이 고려되고 있어서 산관학 연계 업무로 지원업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조직개편은 도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개편안에 따르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 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칭)지역인재육성 상생발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 유사조직으로서 광주의 대학발전협력단(TF팀)은 현재 9명(시 4명, 교육청 1명, 대학 4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청년인구 유출 대응, 지역산업 및 일자리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함에 따라 22년 16명(시 10명, 교육청 1명, 대학 5명)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

- 부산의 경우 2019년 전국 최초로 대학협력단을 구성하여 14명의 조직(시 10명, 대학 4명)을 운영 중에 있음
- **상생발전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1차적으로 (가칭)지역인재육성 상생협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업무이며, 상생협력협의체가 구체적인 상생협력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원**
 - (가칭)지역인재육성 상생협력협의체는 지자체-대학-기업의 상시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책 마련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상생협력과제 도출 및 제도 개선 발굴 등을 목표로 운영
-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위한 지원 조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북은 대학지원사업을 다양한 유관부서에서 수행하여, 산학협력 및 대학 협력을 총괄하는 부서가 부재한데, 부산광역시와 지산학협력과나 타도의 사례에서 처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담당 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표 5-2 | 도 단위의 대학지원 조직현황 •

구분	부서	과(팀)	담당업무
강원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대학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 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 •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교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협력업무 총괄, 대학관련 행사 및 대학총장 내방 등 지원 • 지역선도대학, 국립대학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사업 등 •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학생 관련 업무 등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협력담당 업무 총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 도립대학 및 도내대학 지원 업무 • 대학 협의체 운영지원 및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 대학별 산학협력사업 발굴, 지원 • 대학 지역기여사업 추진 지원 •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지원 등

구분	부서	과(팀)	담당업무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지방대학 협력 및 상생발전 사업 •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교육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교육협력관제 운영 등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운영, 전남 인재학당 운영 • 농어촌 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에 관한 사항, 인성·직업 체험의 날 운영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협력팀 업무 총괄 • 지방대학 육성, 충북학사 운영 등 • 도립대학, 대학협력 등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교육부 공모사업, 충남형 모델) •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회 등 운영 • 충남도립대 및 지역대학 육성지원업무
제주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정책팀 업무 총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관련 사항 • 대학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

3.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기여 증진

- 지역-대학 연계협력 지원사업은 지역과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
- 현재 대학과 지역사회 간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협력 프로그램으로 지역협업센터 (Regional Cooperation Center: RCC) 사례가 있음
 - 전북의 경우,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에서 지역협업센터를 운영하며,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해가며, 취업 기회도 확대해가고 있음

• 표 5-3 | 전라북도 지역협업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사업내용	센터명
군산대학교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제작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 인문산학협력센터 관광지원팀
우석대학교	• 한옥마을 활성화 전략 모색(먹거리 개발, 활성화 지원,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 국악공연, 역사가이드 활동 등 진행하며 학생 취창업기회 창출)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전주한옥마을 RCC • 완주군전통시장 RCC
원광대학교	• 유네스코 백제문화 유적지인 고도익산의 역사문화 예술전반 인문·문화 콘텐츠 양성 사업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창업 및 예비창업자 지도 및 교육, 로컬푸드 지원사업 • 원도심 활성화 및 농촌지역 행복마을 조성 사업	• 고도익산 RCC • 사회적경제 RCC • 행복도시 RCC
전북대학교	• 리빙랩 활동을 통한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 자원화 • 지식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양성	• 지역 도시재생 RCC • 도농 산업 상생 RCC
전주대학교	•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확대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서비스러닝센터 운영으로 전공 실무 경험 획득	• 사회적경제협업 • 지역현안서비스러닝

출처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대학-지역연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재정리

주 :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산학협력 고도화형 RCC 운영 현황 및 성과자료 분석

-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대화 및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하며, 대학은 이를 지원하는 입장이어야 함
 - 재정지원사업 자체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지역주민, 즉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접근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집단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교수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를 해결하며 논의,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고, 대학의 규모 및 구조, 주력분야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세밀한 지원설계가 필요

대학의 자발적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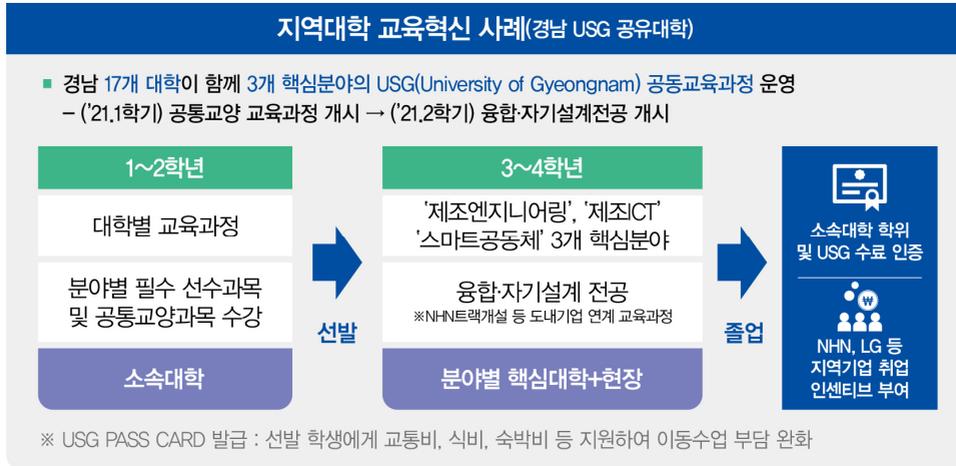
-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습경험 축적 등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둘째,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학의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등의 역할이 있을 것임
 - 두 측면 모두 대학-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게 됨
- 한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후자보다는 전자의 목적에 의해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온 측면이 많음
 - 물론 다양한 실무 경험 습득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의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함
- 서구의 사례에서는 개별 대학이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 주도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지방대학의 경우 대부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미국 대학이 대학 차원에서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대학이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자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운영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교수-교직원-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활성화, 장단기 자원봉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 운영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함
- 각 대학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대학이 스스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지자체-대학-지역기업 협력체계 강화

지역혁신기반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지자체-대학에 비하여 지역대학-지역기업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이 형성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자체-대학-기업 간 지역혁신 기반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에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여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 예정
- 국고 1,710억 원이 지원되며,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며,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국내 최초로 지역단위 공유대학(원) 모델을 수립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하고 공동으로 인재양성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공유대학 모델은 온라인 교육 인프라, 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모색하는 것인데, 경남 USG 모델의 경우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ICT, 공동체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
 - 충북은 오송 바이오텍 연합대학원 모델을 수립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하여, 도내 특화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로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인재 양성-일자리 수요 매칭
 - 광주·전남은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대학 재학생 대상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

• 그림 5-2 |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구축 •



출처 : 교육부(20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신규 참여 지역 공모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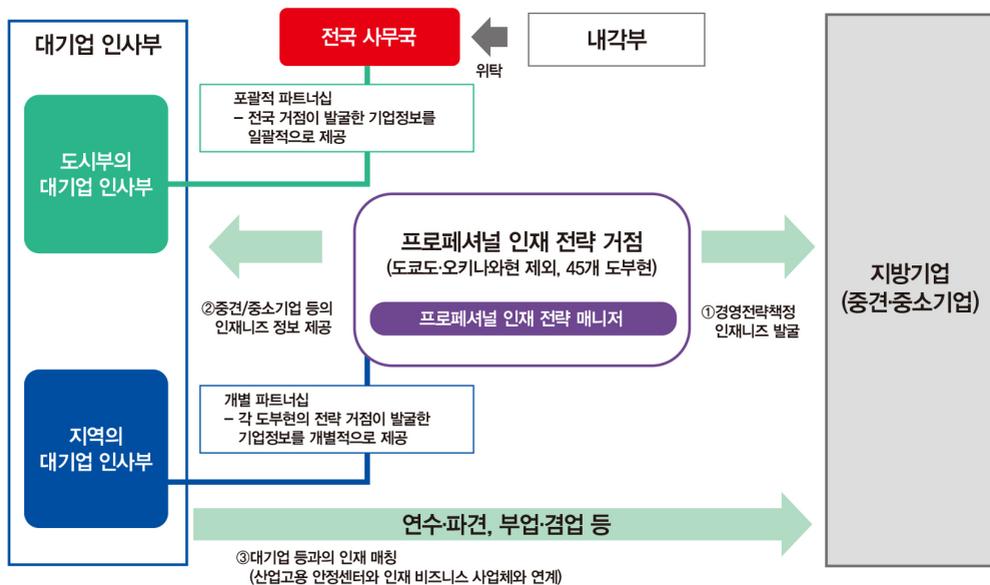
- 물론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경남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LG전자, NHN 등 지역 인재 입장에서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과 연계된 사례라 지역기업 차원의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이 되도록 유도될 필요도 있음

우수인재 연계를 통한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지자체-지방대학-지역기업 간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악순환의 고리는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의 지역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리는 데에 있음
 - 지방에서 있어서도 한정적인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으로의 취업만을 선호하고 있어, 지역기업은 구인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나, 청년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역에 고품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사람과 일자리의 선순환을 창출하기 위해, 일본은 산업인재 환류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프로페셔널 인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지역기업이 사업혁신이나 신상품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영혁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기업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임

-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기업 경영자들에게 경영혁신을 촉구하며, 전문인재의 영입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방에서는 영입할 수 없는 수도권 대기업의 전문가들을 해당 기업과 인재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대기업에 지역기업을 위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해당 인재를 기한부로 파견 또는 연수의 형태로 지역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참여하기로 한 대기업이 2021년 4월 현재, 캐논, 소니, 일본경제신문사 등 35개 기업에 이룸
- 대기업 직원이 지역으로 이주해와 지역기업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므로, 일주일에 1~2일간만 지역기업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부업·겸업에 관한 지침'도 마련
- 이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인재교류 사업으로서, 한국의 경우도 대학-지자체-지역기업 간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역혁신 기반 지원사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그림 5-3 | 일본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 거점사업 추진체계 •



출처 : 厚生労働省 プロフェッショナル人材戦略ポータルサイト, 'パートナーシップ企業'
 (https://www.pro-jinzai.go.jp/about/scheme.html#scheme01, 검색일: 2021. 10. 21)

참고문헌

[국내자료]

- 교육부(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 김정희(201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연구: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17(1): 105-135.
- 김지은(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1(3): 69-86.
- 류연택·정희선(2007).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개발: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89-103.
- 박진경(2020).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20. 8. 18).
- 박진경 외(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부산광역시(2019). 2019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선정대학 공고문.
- 부산광역시(2019). 부산시 산학협력단 결과공고문.
- 부산광역시(2020). 부산광역시-부산권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협약.
- 부산광역시교육청(2021). 부산교육청과 부산지역대학 지방대학위기 공동대처 보도자료.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2019). 대학-지역연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이상림(2020). 지방인구위기와 대응방향: 인구이동관점의 접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20. 8. 18).
- 이소영(2021).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지방대학의 융복합 미래전략. 제1회 국회미래포럼(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2021. 4. 22).
- 이소영·김도형(2021).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021). 2021년 대학-지역연계 협력 지원사업 공고.
- 전라남도(2021). 2021 전라남도 주요 업무 계획.
- 전라남도(2021). 전남도. 대학-지역 연계협력사업 공모.
- 전라북도(2020. 12). 2017~2037년 전라북도 시군 장애인구특별추계.
- 전라북도(2021).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검토(안).
- 전재식·박동·남기곤(2016).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영태(2021). 국가거점국립대의 생존전략: 인구학적 관점에서, 2021년도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도전과 미래) (2021. 8. 26).
- 통계청(2019. 6). 장애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 통계청(2021. 1).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통계청(2021). 2020년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

[국외자료]

- 国立大学法人 山口大学(2016).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 COC+ “オールやまぐち”で若者の山口での活躍をバックアップ! 平成28年度 事業報告書」.
- 内閣官房 まち・ひと・仕事創生本部(2019). 第2期「まち・ひと・仕事創生総合戦略」.
-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1). 「地方大学:産業創生交付金事業について」.
- 文部科学省(2021). 「地方大学を活用した雇用創出:若者定着」.
- 文部科学省(2020). 「地域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仮称)構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ポイント)案」.
- 文部科学省 科学技術・学術政策局 産業連携 地域支援課 地域支援室(2021). 「共創の場京成支援プログラム(地域共創分野)について」.
- 日本学生支援機構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asso.go.jp>).

地方大学の振興及び若者雇用等に関する有識者会議(2017),「地方創生に資する大学改革に向けた中間報告」,
総務省(2015).「奨学金を活用した大学生等の地方定着促進要綱」. 総務省自治財政局.
EU(2011). Connecting Universities to Regional Growth: A Practical Guide.
Hill, K and Hoffman.D.(2009).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Regional Economics, ASU School of Business.

[웹자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광역시 교육정보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edu/index>).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전라남도 전남새뜸홈페이지(news.jeonnam.go.kr).
